

세미나자료 2006-02

육아정책개발센터 창립 1주년 기념 육아정책 세미나

육아정책의 통합적 접근(II)

· 일시 | 2007. 1. 9(화) 13:3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세미나자료 2006-02

육아정책개발센터 창립 1주년 기념 육아정책 세미나

육아정책의 통합적 접근(II)

· 일시 | 2007. 1. 9(화) 13:3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창립 1주년 기념 육아정책 세미나

육아정책의 통합적 접근(II)

□ 일 시 : 2007. 1. 9(화) 13:3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

사회: 이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4:10~15:30 주제 1. 전문성 측면에서 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과제와 전망

14:10~14:40 주제발표 이미화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14:40~15:10 지정토론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지성애 (전남대학교 교수)

최남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장)

15:10~15: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5:30~15:50 휴식

15:50~17:20 주제 2. 중장기 육아비용 지원계획의 기대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15:50~16:20 주제발표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16:20~17:00 지정토론 김순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

김심환 (전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태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17:00~17:2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20 폐회

차 례

주제발표 1. 전문성 측면에서 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과제와 전망 1	
토 론	43
주제발표 2. 중장기 육아비용 지원계획의 기대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61	
토 론	95

주제발표 1

전문성 측면에서 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과제와 전망

이 미 화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영유아의 발달 특성 및 교육과정의 성격상 영유아교사의 역할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절대적이며, 어떤 물리적 환경이나 내용보다 더 중요하므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됨(Katz, 1984).
 - 영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나 자질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음.
 -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현재 상황에 적합한 유능한 교사의 조건은 인격적 자질과 함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박은혜·김명순·신동주·정미라, 2003; 조부경·김정화, 2000).
 - 각 사회마다 전문직을 규정하는 조건도 다양하고,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포함하는 육아지원인력¹⁾의 전문성 확립을 위한 조건을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 대체로 육아지원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견해는 다양함.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관점에 따라 그 역할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음. 유치원교사의 경우 초중등 교원처럼 교직원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나 보육교사의 역할을 규명할 때는 관점에 따라 그 기준이 다양함.
 - 보육은 돌봄 노동의 특성을 지닌 양육과 보호 위주의 복지적인 측면이 강조될 때의 기준과 보육을 유아교육과 동일선상에서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될 때의 기준에 차이가 있음. 개별적인 양육과 보호위주의 돌봄 노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전문성 측면에서 다양한 기준의 보육교사가 필요함.
 - 그러나 영유아가의 경험이 이후 생활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수요자인 영유아는 다니고 있는 기관에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교사에게 보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역할을 유사하게 보고,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성 측면에서 고찰하였음.
-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은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발달될 수 있음.

1) 본 연구에서는 0~5세 영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육아지원기관으로 정의하고, 육아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 중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육아지원인력으로 한정하여 연구범주에 포함하였음.

- 전문가로서의 교사는 양성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기초로 하여 반성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에 근거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함. 그러므로 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실천적 지식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 영유아교사 양성과정은 1년 훈련과정부터 4년제 대학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각 양성기관에서 배출되는 교사의 전문성의 편차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음.
- 양성과정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육아지원체제의 이원화에 따른 관련법과 소관부처의 이원화에 의한 차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육아지원인력 자격기준의 이원화로 인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은 물론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영유아가 불이익을 받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재정적인 낭비와 손실이 늘 수 있음. 따라서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격기준의 변화를 위한 대안 모색이 요구됨.
- 영유아에게 질적인 보육과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급진적인 개혁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원화된 현 체제에서부터의 순차적 발전 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대학 및 기관의 양성교육과정과 자격부여과정 등 자격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함.
 - 이 과정에서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하여 수급이 적절한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출산율의 감소에 따른 유아교육 및 보육의 대상 아동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런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유치원과 보육시설 수요 규모의 변화를 통해 장래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할 교사의 수요를 예측하는 연구는 육아지원인력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2. 연구의 목적

- 유치원과 보육시설 수요 규모의 변화를 통해 장래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할 교사의 수요를 예측하여 육아지원인력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수급개선과 자격제도 개선을 통해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가.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수행 수준 분석²⁾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수행 수준과 관련요인 분석

나. 육아지원인력의 자격제도³⁾ 개선을 위한 요구 파악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양성과정의 적절성 평가와 적정 수업연한 조사 및 비교
- 교사 양성기관 및 대학의 교수를 대상으로 양성과정의 적절성 평가와 개선안, 자격관련 개선안, 교사자격 일원화 관련 의견 조사

다. 육아지원인력의 수요예측과 공급파악을 통한 수급 전망

-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대상연령인 0~5세 아동수 예측
-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유치원 취원율과 보육시설 이용률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유치원 취원율과 보육시설 이용률 각각 예측
- 예측된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아동수와 유치원 취원율 및 보육시설 이용률을 이용하여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0~5세 아동들 중 유치원에 취원하는 원아수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 각각 예측
- 2005년도 유치원 학급당 아동수, 2005년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법정 교사대 아동 비율, 2005년도 교사 1인당 아동수를 각각 기준으로 삼고,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0~5세 아동들 중 유치원에 취원하는 아동수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를 이용하여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교사수 예측

2) 육아지원인력을 전문직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음. 교사의 전문적 역할을 교육(보육)프로그램, 자기개발, 교육(보육)신념, 자율성, 책임성 등 5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영역에서의 교사의 역할 수행과 인식을 전문성수행 수준으로 보았음.

3)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과 기관의 양성과정, 자격기준 및 자격부여방식을 육아지원인력의 자격제도로 표기하였음.

- 보육교사교육원, 전문대학, 대학교, 원격대학별로 배출하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수 파악 또는 추정

라.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 제시

- 선행연구와 통계자료 분석,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근거로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음.
 - 육아지원인력의 수급 예측을 통해서 본 전문성 제고 방안
 -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수행 실태를 통해서 본 전문성 제고 방안
 - 육아지원인력의 자격제도 개선을 통해서 본 전문성 제고 방안

4. 연구 방법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포함하였음
 -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 고찰
 - 조사연구
 - 전문가 의견 조사
 - 교사 의견 조사
 - 수요예측 및 공급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 육아정책개발센터 자체 워크숍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II.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개념 및 관련요인

1.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개념

- 전문성이란 개인적인 차원의 특성으로 직업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의미함.
 - 즉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 오랜 기간 자신의 직업에 헌신하는 태도, 전문가로서 지니고 있는 지식에 의해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믿는 태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봄(이은화 외, 1995).

□ 육아지원인력과 전문성

- 육아지원기관의 원장 및 시설장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에 상응한 전문적 자질과 이를 활용하고 발달시키고자 하는 개인적 성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육아지원기관의 교사는 진정한 의미의 창조적 전문직이라 할 수 있으나, 전문직으로서의 전문화에 있어서는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봄(김옥련, 2001). 따라서 영유아교사가 전문직으로서 보다 인정받기 위하여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함.

2.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관련요인

가. 양성과정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단계는 전문적 태도,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사전교육(pre-education)이 이루어지는 양성과정임.

- 우리나라 육아지원인력의 사전교육은 대학 및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성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교육과정 등이 다양하고 편차가 큰 편임.
 - 유치원교사 양성동일한 자격증을 부여받으면서도 교육연한과 교육과정이 많이 다르며 보육교사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성되고 있음.
 - 양성대학 중에는 유치원교사 또는 보육교사만을 양성하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의 양성대학에서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동시에 양성하고 있음.

1) 유치원교사의 양성과정

□ 유치원교사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에서 양성되고 있음.

-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유아교육과와 유아교육 관련학과⁴⁾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유아교육관련학과의 경우 정원의 10%에서 30%이내에서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4) 아동복지학과, 가정학과, 초등교육학과, 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사회사업학과, 가정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보육학과 등 13개 학과

- 2005년 현재 유치원교사는 106개의 전문대학, 71개의 4년제 대학(관련학과 대학 포함)에서 양성되어, 주로(67%) 전문대학이 유치원교사의 주 배출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표 1〉 유치원교사 양성기관별 학교 수(2005)

단위 : 개

구 분	전체	전문대학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	방송통신대 학	산업대
국립	15	4	10	1	0
사립	166	102	61	0	3
계	181	106	71	1	3

-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에서 요구되는 과목은 크게 교양, 교직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됨.
 - 유치원교사 양성대학의 졸업 이수 학점을 비교해 보면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의 교양과정은 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양과정의 2배 정도임.
 - 전공과정은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의 경우 졸업이수 학점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공과정의 비율은 낮은 비중을 차지함.

〈표 2〉 대학별 교과목 및 학점 비교(2004)

구 분	교과목 및 학점						
	교양	전공			일반 선택	교직	최저이수학점
		필수	선택	계			
4년제 유아교육과	21-48	12-33	23-65	48-87	32-53	15-22	140-144
4년제 유아교육과 관련학과	34-35	3-17	33-53	36-70	35-56		126-140
3년제 유아교육과	10-34	4-45	35-84	81-95		19-29	123-142
2년제 유아교육과	8-21	2-38	15-67	51-82		16-25	80-104

출처: 홍혜경·김영옥·지성애(2003). 한국 영유아 교원의 양성을 위한 대학에서의 교과과정 현황 및 과제. 2003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2) 보육교사의 양성과정

- 보육교사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가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1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양성되고 있음.
 - 2004년도 현재 대학(전문대학)의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를 핵심학과⁵⁾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학에는 62개, 전문대학에는 180개로 총 273개 대학

이 있음(서문희 외, 2005).

- 그러나 2005년 입학생부터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학과 이외에서도 양성될 수 있음.
-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또 다른 교육기관으로 보육교사교육원이 있는데 보육교사교육원은 2006년 현재 전국에 80개소가 있음. 이중 대학부설 49개소, 민간31개소임(여성가족부, 2006년 보육사업안내).

〈표 3〉 보육교사 양성기관별 학교수(2004)

단위 : 개

구 분	전체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방송통신대학	보육교사교육원	
관련학과	1,060	462	546	5	대학부설	49
핵심학과	273	180	62	-	민간보육교사교육원	31
계	1,333	642	608	5	80	

출처: 서문희·박지혜·최진원(2005).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기준 연구. 여성가족부.

- 보육교사 양성대학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각 6개 영역마다 이수해야 할 학점을 지정하여 총 12과목 35학점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5개 영역인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과 보육실습으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필수 5과목과 7과목 이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총 12과목 이상, 총 35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였음.
- 교육훈련시설인 보육교사교육원은 3급 보육교사 양성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보육실습을 포함하여 25과목, 총 65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나. 자격기준

- 교육적 훈련을 통해 습득한 전문적 태도, 지식 및 기술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단계가 필수적임.
 - 특히 전문직의 자격부여가 이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 육아지원인력에 대한 자격부여는 무시험 검정방식으로 졸업과 동시에 자격이 부여되고 있음. 이에 영유아교사직을 전문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준전문가에 그친다고 보는

5) 아동, 보육, 유아교육 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학과

견해가 많음.

- 우리나라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이원화되어 있음. 3-5세 유아를 위한 유치원교사자격증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0-5세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음.

1) 유치원교사 자격 기준

□ 유치원 교원의 자격은 유아교육법 제 22조에 제시되어 있음.

- 유치원 교원은 원장 및 원감, 1급 및 2급 정교사, 준교사로 나누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음. 단,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음.

〈표 4〉 유치원교사의 자격 기준

종별/급별	자 격 기 준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보육교사 자격 기준

□ 보육교사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 21조에 제시하고 있음.

- 보육교사 1·2·3급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5〉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종별/급별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다. 수요와 공급

-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유지의 요건 중 하나로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와 공급을 들 수 있음.
 - 교사의 공급 과잉은 급여 수준의 저하, 잦은 이직, 경력 교사 부재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교사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 또한 수급에 관한 과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함.

라. 기타 관련요인

- 재교육과정
 - 일련의 양성 및 자격 과정을 거친 전문직의 다음 단계는 획득한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임.
 - 육아지원인력 또한 승급교육 및 다양한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속적인 재교육 참여가 중요함.
- 근무여건
 -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영유아교사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수와 사회적 인정을 통해 전문화 정도를 높이는 중요 요인임.

Ⅲ.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전문성 관련요인

□ 조사 대상

- 전문가 의견 조사와 교사 의견 조사에 참여한 대상의 수 및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6〉 조사 대상의 특성

구분	대상 인원 (명)	연령(세)	최종학력(%)			전공(%)		경력(개월)	근무기관(%)		
			고졸	전문대	대졸 대학원졸	유아 교육	유아 교육외		국공립	사립 (민간)	
유치원 교사	546	32.9(7.6)	37.4	41.2	21.4	93.2	6.8	120.7(92.8)	61.9	38.1	
보육 교사	564	30.4(6.6)	22.0	52.8	23.9	1.2	59.3	40.7	59.4(33.6)	41.8	58.2
전문가	190	45.7(7.8)		0.6	99.4	27.5	72.6				

주1: 연령과 경력은 평균 및 표준편차임.

주2: 유치원장과 보육시설장의 경력은 총 교육·보육 경력임.

1. 유치원교사

가. 유치원교사의 전문성수행 수준 및 관련요인⁶⁾

□ 유치원교사의 전문성수행 수준 및 관련요인

- 전문성수행 수준 자기평가
 - 유치원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수행 수준에 대해 평가(4점 척도)한 결과 총 평균이 3.20점이었고, 5개 영역 모두에 대해서도 3점 이상으로 나타났음. 영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교육신념과 책임성 영역에 대해 각각 3.48점, 3.4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프로그램 영역에 대해서는 3.0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교사의 전반적인 전문성수행 수준은 학력이 높을수록, 상위자격을 소지할수록, 자격을 상위학교에서 취득할수록, 경력이 길수록, 국공립 교사일수록 전반적인 전문성수행 수준이 높았음.

6) 부록의 〈부표 1〉 참조

〈표 7〉 유치원교사의 전문성 수행 영역별 평균¹⁾

단위: 점(명)

구분	전체	교육 프로그램	자기계발	교육신념	자율성	책임성	계
전체	3.20	3.03	3.13	3.48	3.28	3.41	(546)
▪ 학력							
전문대졸	3.11	2.96	3.02	3.43	3.15	3.27	(204)
대졸	3.21	3.02	3.15	3.50	3.32	3.45	(225)
대학원졸	3.31	3.14	3.28	3.50	3.43	3.60	(117)
<i>F</i>	20.81***	13.32***	17.26***	1.76	14.53***	24.70***	
▪ 소지자격							
1급 이상	3.26	3.09	3.19	3.48	3.38	3.51	(286)
2급	3.13	2.95	3.07	3.47	3.17	3.31	(260)
<i>t</i>	27.68**	26.98**	12.42**	0.13	25.82**	30.62**	
▪ 자격취득경로							
전문대 졸업	3.16	2.99	3.08	3.46	3.23	3.36	(309)
4년제 대학 졸업	3.22	3.04	3.18	3.48	3.34	3.46	(194)
교육대학원	3.34	3.19	3.28	3.54	3.42	3.59	(43)
<i>F</i>	9.11***	7.79**	6.94**	0.67	4.88*	7.75**	
▪ 근무기관유형							
국공립	3.24	3.05	3.19	3.48	3.37	3.51	(338)
민간	3.13	2.98	3.03	3.47	3.14	3.25	(208)
<i>t</i>	20.28**	5.76*	22.39**	0.18	28.07**	48.40**	
▪ 경력							
3년미만	3.10	2.92	3.06	3.48	3.11	3.25	(114)
3-5년	3.15	2.99	3.07	3.48	3.21	3.32	(117)
6-9년	3.14	2.97	3.09	3.40	3.23	3.37	(86)
10년이상	3.28	3.12	3.21	3.50	3.42	3.56	(229)
<i>F</i>	14.12***	12.63***	5.24**	1.40	13.09***	17.37***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임.

◦ 전문성수준 인식 및 관련요인

- 유치원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수의 56%정도가 유치원교사의 전문성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 대다수가 '근무여건 및 처우'라고 생각하였음. 한편 유치원교사의 전문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교수들은 그 이유에 대해 대다수가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꼽음.
- 유치원교사들은 유치원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인에 대해 주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인적 자질', '재교육 과정'으로 보고함.

나. 유치원교사 자격제도에 대한 평가와 요구⁷⁾

□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의 적절성 평가

○ 전문가 평가

- 재직학과 양성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절성 평가 결과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학점⁸⁾과 ‘전공과목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90.0%, 91.8%로 높았고, ‘교양·전공·교직의 비율’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5.5%로 가장 낮았음. 특히 대학교 양성학과의 교수들은 전문대학 교수들에 비해 ‘수업연한 및 졸업이수학점’과 ‘교양·전공·교직의 비율’ 면에서 재직학과의 양성과정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하였음.

〈표 8〉 교수의 재직기관별 재직학과의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의 적절성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전문대	4년제 대학
수업연한 및 졸업이수학점	88.2	80.7	96.0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학점	90.0	93.0	86.0
교양, 전공, 교직의 비율	75.5	64.9	90.0
전공과목 구성 및 내용	91.8	93.0	90.0
실습운영	83.6	86.0	82.0
교수진의 전문성	87.3	89.5	84.0

○ 유치원교사 평가

- 자신이 졸업한 학과의 양성과정 적절성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평가에 따르면, 양성과정 중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학점’과 ‘전공과목’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85.2%, 85.7%로 높았고, ‘실습운영’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0.1%로 가장 낮았음. 특히 ‘실습운영’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대해 4년제 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교육대학원이나 전문대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보다 더 적절하다고 평가함.

□ 유치원교사 양성과정 개선에 관한 의견

○ 전문가 평가

- 유치원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수들 중 현행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 중 ‘실습’과 ‘교양’영역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교양과목

7) 부록의 〈부표 2〉 참조

은 전공관련 교양과목으로 운영하고, 교직과목은 유아교육의 특성에 맞게 유아교직과목으로 대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표 9〉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 중 강화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단위: %(명)

구분	실습	교양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	계
전체	27.3	26.4	21.8	13.6	10.9	100.0(110)
▪ 수업연한						
전문대	29.3	32.8	13.8	12.1	12.1	100.0(58)
4년제	24.5	20.4	32.7	12.2	10.2	100.0(49)
▪ 재직학과						
유아교육	26.0	28.1	20.8	13.5	11.5	100.0(96)
유아교육 외	38.5	15.4	30.8	15.4	0.0	100.0(13)

- 다수의 전문가가 유치원교사 양성은 현행의 양성학과 중심을 유지하고, 유아교육의 특성에 맞는 평가를 실시하여 현행 학문/학과 평가를 대치하며, 표준화된 양성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봄.

◦ 적정 수업 연한에 대한 의견

- 유치원교사 양성의 적정 수업연한에 대해 교수들과 유치원교사 모두 4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72%, 67%로 가장 많았음.

□ 유치원교사 자격관련 요구

◦ 자격증 세분화

- 유치원교사 자격과 관련하여 유치원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수들은 80%정도가 자격증의 세분화가 필요하고, 대부분이 현행대로 하되 수업연한에 따라 호봉 차이 외에 승급 시 요구되는 경력의 차이를 두는 방안을 선택하였음.

◦ 자격증 부여방식

- 자격증 부여방식으로는 ‘이수학점과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국가고시’는 그 다음으로 많았음. 자격증 갱신에 대해서는 76%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방법으로는 ‘승급교육 외에 별도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대다수가 선택하였음.

다. 유치원교사의 수급 현황 및 추계

1) 유치원교사 수요 예측

□ 아동수 예측

- 향후 15년간의 시도별, 연령별 3세~5세에 해당하는 아동수로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자료를 사용함.

□ 유치원 취원율 예측

- 지난 4년간의 시도별, 연령별 취원율을 시계열 자료로 이용하여, 향후 15년간의 시도별, 연령별 유치원에 취원하는 3세~5세 아동의 비율을 예측함.
- 기존 취원율 산출 방법

$$r_t = \frac{t\text{년의 유치원 취원아수}}{t\text{년의 주민등록 인구수}}, t = 2002, \dots, 2005$$

- 유치원 취원아수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연도별 통계 자료를 사용함.
- 주민등록인구수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연도별 통계 중 12월 31일 기준의 통계 자료를 사용함.
- 시계열을 이용한 향후 취원율 및 이용률 산출 방법
 - 로지스틱 예측모형을 기본으로 시계열 회귀분석 모형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결합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결합모형에 의한 함수식을 이용하여 예측값을 산출함(유치원 취원율 예측 결과는 부록의 <부표 3> 참조).

□ 유치원 취원아수 예측

- 향후 15년간의 시도별, 연령별 유치원에 취원하는 3세~5세 아동수를 예측을 위하여 향후 아동수와 취원율의 예측값을 이용함.

$$r_t = t\text{년의 아동수} \times t\text{년의 취원율}, t = 2006, \dots, 2020$$

- 유치원 취원아수의 예측 결과는 부록의 <부표 4> 참조.

□ 교사수 예측을 위한 예측변수값 산출

- 향후 15년간 시도별, 연령별 유치원교사수 예측 시 기준이 되는 세 가지 예측변수를 선정하여 그 값을 산출함.
- 예측변수 1: 법정 교사 대 아동 비율
 - 2005년도 현재 법정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준으로 향후 유치원 원아

수 예측값을 이용하여 산출함.

- 법정 교사 대 아동 비율: 법정 유치원 학급당 아동수를 이용하였음. 유치원 학급당 아동수 기준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하여 16개 시도별로 각기 다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이용함.
- 법정 기준이므로 예측값의 과소추정의 여지가 있음.
- 예측변수 2: 교사 1인당 아동수
 - 2005년도의 취원 아동수 대비 유치원교사수를 시도별로 산출하여, 향후 유치원교사수의 예측값을 산출함.

$$r_t = \frac{t\text{년 유치원 원아수}}{2005\text{년 유치원교사 1인당 아동수}}, t = 2006, \dots, 2020$$

$$2005\text{년 유치원교사 1인당 아동수} = \frac{2005\text{년 유치원 원아수}}{2005\text{년 유치원교사수}}$$

- 교사수의 실제값과 가까운 예측값을 산출할 수 있는 변인임. 그러나 여전히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향후 15년간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있으므로 교사수의 과소추정의 여지가 있음.
- 예측변수 3: 유치원 학급수 및 학급당 아동수
 - 2005년도 현재 학급수를 이용하여 산출된 학급당 아동수와 향후 유치원원아수 예측값을 기초로 산출함.
 - 예측변수 1을 이용한 교사수 예측값 산출 공식

$$r_t = \frac{t\text{년의 유치원 원아수}}{2005\text{년 학급당 아동수}}, t = 2006, \dots, 2020$$

$$2005\text{년도 학급당 아동수} = \frac{2005\text{년 유치원 원아수}}{2005\text{년 유치원 학급수}}$$

- 국공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전 유치원에서 학급당 교사수가 1인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예측값임. 실제 현장에서 학급당 교사수가 1인 이상일 수 있으며, 향후 15년에 걸쳐 보조교사 제도 등의 도입이 가능하므로 유치원교사 예측값의 과소추정의 여지가 있음.
- 유치원에만 적용된 예측변수임: 「보육통계」에서 학급수가 제공되지 않으며, 실제 20인 이하 보육시설의 경우 학급 구분 없이 보육이 가능하므로, 학급당 아동수를 예측변수로 이용한 예측은 이루어지지 않음.
- 이상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 예측변수 1, 예측변수 2, 예측변수 3은 부록의 <부표 5>와 같음.

□ 유치원교사 수요 예측 결과

- 위의 세 가지 예측변수를 이용하여 향후 15년간 시도별, 연령별 유치원교사 수를 예측함(부록의 <부표 6> 참조).
- 교사 수요 전망
 - 유치원교사의 수요는 2009년과 2010년에 약간의 증가세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향후 15년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됨. 이는 3세 담당 교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4세 담당 교사 수요가 변동이 거의 없으며, 5세 담당 교사의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이에 의한 결과임.
- 예측변수에 따른 차이
 - 유치원교사 예측의 경우, 예측변수에 따라 예측값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음. 2005년도 유치원교사수를 기준으로 비교해볼 때(2005년도의 유치원교사수 26,383명), 예측값 2와 예측값 3은 교사수요가 과소추정 되었으므로, 예측값 1이 가장 타당한 예측값으로 판단됨.

2) 유치원교사의 공급 현황

□ 유치원교사 공급 파악 방법

-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의 유치원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 자료를 이용함.

□ 유치원교사 공급 현황

- 2003년까지 대략 10,000명 내외를 유지해 오다가 2004년에는 전문대학의 유아교육학과 3년제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3,000명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2005년에는 다시 10,000명 수준을 회복함(<표 10> 참조).

〈표 10〉 유치원교사 자격증 발급현황

단위: 명

연도	시도교육청	대학(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계
1999	-	784	8,554	-	-	9,338
2000	2	737	9,202	-	-	9,941
2001	1	838	9,444	-	-	10,283
2002	-	926	9,040	-	-	9,966
2003	-	1,044	9,524	-	-	10,568
2004	11	1,185	1,758	-	-	2,954
2005	-	1,342	7,825	1,327	258	10,752
계	14	6,856	55,347	1,327	258	63,80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통계연보」

주: 2005년부터 방송통신대학과 산업대학의 교원자격증 발급현황을 추가함.

3) 유치원교사의 수요와 공급 전망

□ 유치원교사 수요와 공급의 적절성 평가 방법

- 향후 15년간 유치원교사의 수급 전망은 ① 위에서 예측된 교사수 예측값을 이용하여 연평균 ‘수요변동규모’를 산출하고, ② 과거 퇴직교사수를 근거로 퇴직률을 구한 후 예측된 유치원 교사수 예측값을 이용하여 ‘추가수요규모’를 산출한 후, ③ 이 두 수치의 합을 공급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수급의 적절성을 판단함.

- 수요변동규모 산출 방법

$$\text{수요변동규모} = \frac{2020\text{년 교사수 예측값} - 2006\text{년 교사수 예측값}}{15(\text{년})}$$

- 추가수요규모 산출 방법

$$\text{추가수요규모} = \frac{\sum t_i\text{년의 퇴직 교사수}}{\sum t_i\text{년의 교사수}} \times \frac{\sum t_j\text{년의 교사수 예측값}}{15(\text{년})},$$

$$t_i = 2002, \dots, 2005, t_j = 2006, \dots, 2020$$

□ 유치원교사 수요와 공급의 적절성 여부

- 향후 15년간의 유치원교사 수요변동규모는 예측값 1의 경우 연간 203명, 예측값 2의 경우 연간 319명, 예측값 3의 경우 연간 274명 감소임.
- 최근 5년간 유치원교사수는 총 125,813명, 퇴직 유치원교사수는 총 9,873명으로, 유치원교사의 평균 퇴직률은 7.84%임. 이를 기준으로 한 향후 추가수

요규모는 예측값 1의 경우 연간 1,409명, 예측값 2의 경우 연간 1,852명, 예측값 3의 경우 연간 1,563명 증가임.

- 위의 수요변동규모와 추가수요규모를 합산한 유치원교사의 향후 신규 수요 규모는 예측값 1의 경우 연간 1,360명, 예측값 2의 경우 연간 1,533명, 예측값 3의 경우 연간 1,289명 증가임.
- 유치원교사 공급규모를 연간 10,000명으로 볼 때, 유치원교사의 수요는 공급의 약 6.5배(예측값 2)~7.8배(예측값 3)임.

□ 유치원교사 수급의 적절성 해석의 유의점

- 유치원교사의 경우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확보되었으므로, 수요와 공급 규모는 비교적 신뢰할만한 수치로 볼 수 있음.
-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유치원교사의 수급은 그 수치상으로 볼 때 불균형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여지나, 실질적으로 유치원교사의 수요는 유치원 뿐 아니라 보육시설까지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수요는 위의 결과보다 큰 규모임.
- 이미화 외(2004)의 전국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중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교사의 비율은 47.2%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도 「보육통계」의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61,883명의 보육교사 중 23,409명, 즉 37.8%가 유치원교사 유자격자로 보고된 바 있고⁸⁾, 본 연구의 의견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 564명 중 59.3%가 유아교육 전공자로 보고됨. 즉, 보고되는 수치의 불일치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유치원교사의 수요는 유치원 뿐 아니라 보육시설이 포함됨. 따라서 유치원교사의 수요규모는 이상에서 보고된 연간 1,500명 증가를 훨씬 상회하는 수이며, 유치원교사 수급의 적절성은 유아교육만을 독립적으로 논의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보육교사

가. 보육교사의 전문성수행 수준 및 관련요인⁹⁾

□ 보육교사의 전문성수행 수준 및 관련요인

- 전문성수행 수준 자기평가
 - 보육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수행 수준에 대해 평가(4점 척도)한 결과 총

8) 2005년도 이후부터는 「보육통계」에 유치원교사 유자격자수가 보고되고 있지 않음.

9) 부록의 <부표 1> 참조

평균이 3.10점이었고, 5개 영역 모두에 대해서도 약 3점 정도로 나타났음. 영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보육신념과 책임성 영역에 대해 각각 3.37점, 3.3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프로그램 영역에 대해서는 2.9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전문성수행 수준은 교사의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고,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높았음.

〈표 11〉 보육교사의 전문성 수행 영역¹⁾별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전체	보육 프로그램	자기계발	보육 신념	자율성	책임성	계(수)
전체	3.10	2.94	2.99	3.37	3.16	3.34	(564)
▪ 학력							
고졸	3.08	2.93	2.91	3.37	3.19	3.36	(124)
전문대졸	3.07	2.91	2.98	3.34	3.14	3.30	(298)
대졸 이상	3.16	3.01	3.06	3.43	3.18	3.41	(142)
<i>F</i>	5.30**	5.44**	4.50*	1.86	0.48	3.20	
▪ 소지자격							
1급	3.10	2.95	3.02	3.38	3.15	3.33	(367)
2급	3.08	2.93	2.92	3.36	3.19	3.37	(197)
<i>t</i>	0.55	0.26	8.33**	0.20	0.97	1.04	
▪ 자격취득경로							
보육교사교육원	3.10	2.95	2.96	3.38	3.19	3.38	(230)
전문대 졸업	3.07	2.92	2.98	3.35	3.14	3.29	(266)
4년제 대학 졸업	3.15	2.99	3.08	3.43	3.16	3.41	(68)
<i>F</i>	2.31	1.55	2.39	0.99	0.51	3.36	
▪ 근무기관유형							
국공립	3.13	2.98	3.07	3.39	3.14	3.34	(236)
민간	3.07	2.91	2.93	3.36	3.18	3.35	(328)
<i>t</i>	5.33	6.36	17.11**	0.59	0.63	0.08	
▪ 경력							
3년미만	3.05	2.89	2.94	3.35	3.13	3.31	(132)
3-5년	3.10	2.96	3.00	3.36	3.17	3.33	(274)
6-9년	3.09	2.92	2.98	3.37	3.16	3.35	(126)
10년이상	3.25	3.10	3.12	3.57	3.25	3.53	(32)
<i>F</i>	4.64**	4.44**	1.93	2.33	0.54	2.47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임.

◦ 전문성수준 인식 및 관련요인

-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및 기관의 교수들은 88%정도가 보육교사의 전문성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 대다수가 ‘근

무여건 및 처우'와 '자격기준'이라고 보고함.

-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인에 대해 주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인적 자질', '사회적 인정'이라고 보고함.

나. 보육교사 자격제도에 대한 평가와 요구¹⁰⁾

□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적절성 평가

○ 전문가 평가

- 재직학과 양성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절성 평가 결과 교수진의 전문성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7.6%로 가장 높았고, '수업연한 및 졸업이수학점'과 '전공과목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해 각각 78.5%, 79.6%로 낮았음. 특히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교수들은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수들에 비해 '수업연한 및 졸업이수학점',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학점', '전공과목 구성 및 내용', '실습운영'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고한 수가 더 많았음.

〈표 12〉 교수의 재직기관별 재직학과 및 기관 양성과정의 적절성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보육교사교육원	전문대	4년제
수업연한 및 졸업이수학점	78.5	56.8	80.8	90.6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학점	83.3	72.7	83.3	90.6
전공과목 구성 및 내용	79.6	63.6	82.1	87.5
실습운영	83.3	70.5	84.6	90.6
교수진의 전문성	87.6	90.9	88.5	84.1

○ 보육교사 평가

- 자신이 졸업한 학과의 양성과정 적절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평가에 따르면,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학점'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9.0%로 가장 높았고, '실습운영'에 대해서는 76.4%로 가장 낮았다. 특히 '수업연한 및 졸업이수학점'과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학점'에 대해 4년제 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2·3년제 대학이나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보다 더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는 반면, '실습운영'에 대해서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더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었음.

10) 부록의 〈부표 2〉 참조

□ 보육교사 양성과정 개선에 관한 의견

◦ 전문가 평가

-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및 기관의 교수들 중 ‘영유아 교육’과 ‘발달 및 지도’ 영역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특히 전공과목과 교직원관련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현재 2년제 이상 양성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12과목 35학점에 대해 78%정도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함.

〈표 13〉 교수 재직기관별 보육교사 양성과정 중 상향조정이 필요한 과목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전공과목	교직과목	교양과목	기타	계
전체	79.3	41.4	25.5	6.9	100.0(145)
보육교사교육원	66.7	47.2	22.2	8.3	100.0(36)
전문대	76.8	41.1	28.6	5.4	100.0(56)
4년제	90.6	37.7	24.5	7.5	100.0(53)

주: 중복응답 결과임.

- 표준화된 양성교육과정에 대해서는 95%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양성과정에 대해 83%정도가 현행의 관련과목 이수자로 개방하는 체제보다 관련학과 졸업생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음.
-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에 대해서는 보육의 특성에 맞는 평가를 실시하여 현행 학문/학과 평가를 대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평가에 대해 92%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원격대학에서 제공하는 양성과정의 문제점으로 주로 ‘보육실습 부실 및 실행문제’, ‘보육교사 과잉공급’, ‘교과목 내용 부실’을 지적하였고, 보육교사교육원의 문제점으로는 주로 ‘수업연한 부족’과 ‘보육교사 과잉공급’을 지적하였음.

◦ 적정 수업 연한에 대한 의견

- 보육교사 양성의 적정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교수들은 4년과 3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 31%로 많았고, 보육교사들은 2년과 3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 38%로 많았음.

□ 보육교사 자격관련 의견

◦ 자격증 세분화

- 보육교사 자격과 관련하여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및 기관의 교수들은 82%정도가 자격증의 세분화가 필요하고, 대부분이 현행대로 하되 수업연한에 따라 호봉 차이 외에 승급 시 요구되는 경력의 차이를 두는 방안을 선택하였음.

◦ 자격증 부여방식

- 자격증 부여방식으로는 '이수학점과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양성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은 학과 및 기관의 졸업생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많았음.
- 자격증 갱신에 대해서는 77%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방법으로는 '승급교육 외에 별도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대다수가 선택하였음.

다. 보육교사의 수급 현황 및 추계

1) 보육교사 수요 예측

□ 아동수 예측

- 향후 15년간의 시도별, 연령별 0세~5세에 해당하는 아동수로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자료를 사용함.

□ 보육시설 이용률 예측

- 지난 4년간의 시도별,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을 시계열 자료로 이용하여, 향후 15년간의 시도별, 연령별 유치원에 취원하는 0세~5세 아동의 비율을 예측함.
- 기존 이용률 산출 방법

$$r_t = \frac{t\text{년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t\text{년의 주민등록 인구수}}, \quad t = 2002, \dots, 2005$$

-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분기별 통계 중 12월 31일 기준의 통계 자료를 사용함.
- 주민등록인구수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연도별 통계 중 12월 31일 기준의 통계 자료를 사용함.
- 시계열을 이용한 향후 취원을 및 이용률 산출 방법
 - 로지스틱 예측모형을 기본으로 시계열 회귀분석 모형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결합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결합모형에 의한 함수식을 이용하여

예측값을 산출함(보육시설 이용률 예측 결과 부록의 <부표 3> 참조).

□ 보육시설 아동수 예측

- 향후 15년간의 시도별, 연령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5세 아동수를 예측을 위하여 향후 아동수와 이용률의 예측값을 이용함.

$$r_t = t\text{년의 아동수} \times t\text{년의 이용률}, t = 2006, \dots, 2020$$

- 보육시설 아동수의 예측 결과는 부록의 <부표 4> 참조.

□ 교사수 예측을 위한 예측변수값 산출

- 향후 15년간 시도별, 연령별 보육교사수 예측 시 기준이 되는 두 가지 예측 변수를 선정하여 그 값을 산출함.

- 예측변수 1: 법정 교사 대 아동 비율

- 2005년도 현재 법정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준으로 향후 보육시설 아동수 예측값을 이용하여 산출함.
- 법정 교사 대 아동 비율: 법정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를 이용함.
- 법정 기준이므로 실제 교사수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측변수 2: 교사 1인당 아동수

- 2005년도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대비 보육교사수를 시도별로 산출하여, 향후 보육교사수의 예측값을 산출함.

$$r_t = \frac{t\text{년 보육시설 아동수}}{2005\text{년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t = 2006, \dots, 2020$$

$$2005\text{년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 \frac{2005\text{년 보육시설 아동수}}{2005\text{년 보육교사수}}$$

- 교사수의 실제값과 가까운 예측값을 산출할 수 있는 변인임. 그러나 여전히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향후 15년간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있으므로 교사수의 과소추정의 여지가 있음.
- 이상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 예측변수 1과 예측변수 2는 부록의 <부표 5>와 같음.

□ 보육교사 수요 예측 결과

- 위의 두 가지 예측변수를 이용하여 향후 15년간 시도별, 연령별 보육교사수를 예측함(부록의 <부표 6> 참조).

- 교사 수요 전망

- 보육교사의 수요는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기는 하나 2020년까지

현재보다 전반적으로 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보육교사 수요는 전 연령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특히 0세와 1세 담당 교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

◦ 예측변수에 따른 차이

- 보육교사 예측의 경우, 예측 변수에 따라 예측값에는 큰 차이가 있었음. 2005년도 보육교사수를 기준으로 비교해볼 때, 예측값 1 과 예측값 2 모두 보육교사 수요 규모를 논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임(2005년도 12월 보육교사수 96,707명: 1급 45,956명, 2급 39,124명, 20인 미만 시설장 11,627명).

2) 보육교사의 공급 현황

□ 보육교사 공급 파악 방법

- 2005년 4월부터 보육교사의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되어 체계적인 발급 업무가 시작됨. 그러나 자격증이 개인 신청에 의해 발급되므로,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규모가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의 규모에 못 미침. 이에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대신 보육교사교육원,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원격대학 별 배출현황을 연구진이 별도로 파악함.

□ 양성기관별 보육교사 배출현황

◦ 보육교사교육원 배출현황

- 수료와 함께 보육교사 자격이 부여되므로 수료자수를 파악함.
- 1992년 4,389명의 수료자 배출로 시작하여 1994년도에 11,966명으로 급증함. 12,010명(2000년)에서 15,906명(1997년) 사이로 수료자 배출의 증감이 반복되다가 2005년에는 최종 11,013명으로 감소함.

◦ 전문대학 배출현황

- 2004년 이후 전공학과 중심이 아닌 이수과목 중심의 개방형 체제로 보육교사 자격부여 방식이 조정되었으므로, 각 전문대학의 보육관련 유사학과 교수진 대상의 전수조사를 통해 학과별 보육교사 배출수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함.
- 총 174개의 전문대학 핵심학과 중 105개 학과의 응답을 기초로 정원 대비 보육교사 배출율을 산출함. 그 결과 2005년도 배출율은 97.4%, 2006년도 배출율은 95.2%임.
- 위의 배출율과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학과별 정원 자료를 이용하여 전문대학에서 배출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보육교사수

를 추정함. 그 결과 2005년도 보육교사 추정 배출자수는 12,507명, 2006년도 보육교사 추정 배출자수는 12,368명임.

-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학과별 정원에 누락된 학과가 있었으며, 복수전공자의 보육교사자격 여부가 설문조사에서 반영 안 되었을 수 있으므로, 전문대학 보육교사 배출자수의 과소추정의 여지가 있음.

◦ 일반 대학교 배출현황

-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배출현황을 파악함. 그 결과 총 119개의 4년제 대학교 핵심학과 중 65개 학과의 응답을 기초로 정원대비 보육교사 배출율을 산출함. 그 결과 2005년도 배출율은 91.9%, 2006년도 배출율은 90.0%임.
- 위의 배출율과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학과 및 전공별 정원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교에서 배출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보육교사수를 추정함. 그 결과 2005년도 보육교사 추정 배출자수는 2,926명, 2006년도 보육교사 추정 배출자수는 3,472명임.
- 전문대학과 공급규모 파악의 제한점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교 보육교사 배출자수의 과소추정의 여지가 있음.

◦ 원격대학 배출현황

- 원격대학에 해당하는 보육교사 양성기관으로는 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대학이 있음. 이에 해당하는 각 학교 또는 학과별로 배출된 보육교사 수 또는 보육실습 과목의 이수자 수를 파악함.
- 방송통신대학교: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학과는 유아교육과, 가정학과, 교육과로서, 유아교육과에서는 보육실습 이수자가 2,300명 내외를 유지한 반면, 가정학과와 교육과는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만 보육실습을 개설하였고, 2006년부터는 보육실습을 개설하지 않음. 따라서 방송통신대학교 내부자료 파악 결과 2005년도 보육실습 이수자수는 6,168명이나, 2006년도 보육실습 이수자수는 2,513명으로 급감함.
- 사이버대학: 2005년도에는 3개 학교의 7개 학과에서, 2006년에는 6개 학교의 10개 학과에서 보육실습을 개설함. 해당 학과의 내부자료 파악 결과 2005년도 보육실습 이수자수/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수는 1,014명, 2006년도 보육실습 이수자수/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수는 1,577명임. 그러나 사이버대학은 2007년 이후 양성학과의 확대로 보육교사 배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

□ 보육교사 공급 규모

- 네 가지 유형의 양성기관을 통해 지난 2005년도에 배출된 보육교사수의 추정치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11,013명, 전문대학에서 약 12,500명, 4년제 대학교에서 3,000명, 방송통신대학교에서 6,168명, 사이버대학에서 1,014명으로, 총 33,700명 내외로 추정됨.
- 이상의 보육교사 배출현황은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의 핵심학과 누락, 전문대학과 일반대학교에서의 핵심학과 졸업생 이외의 자격소지자 누락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과소추정됨.

3) 보육교사의 수요와 공급 전망

□ 보육교사 수요와 공급의 적절성 평가 방법

- 향후 15년간 교사 수급 전망은 유치원교사 수급의 적절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연평균 '수요변동규모'와 퇴직률을 이용한 '추가수요규모'를 산출한 후, 두 수치의 합을 공급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수급의 적절성을 판단함. 단, 보육교사의 경우 퇴직교사수에 대한 통계가 없으므로 추가 수요 규모 산출이 불가능함. 따라서 유치원교사의 퇴직률 7.84%을 보육교사 통계에 적용하여 퇴직 보육교사수 및 추가수요규모의 추정치를 산출함.

□ 보육교사 수요와 공급의 적절성 평가

- 향후 15년간의 보육교사 수요변동규모는 예측값 1의 경우 연간 1,956명, 예측값 2의 경우 연간 1,225명 증가임.
- 향후 추가수요규모는 예측값 1의 경우 연간 9,614명, 예측값 2의 경우 연간 9,088명 증가임.
- 위의 수요변동규모와 추가수요규모를 합산한 보육교사의 향후 신규 수요 규모는 예측값 1의 경우 연간 11,570명, 예측값 2의 경우 연간 10,313명 증가임.
- 유치원교사 공급규모를 연간 33,700명으로 볼 때, 유치원교사의 수요는 공급의 약 2.9배(예측값 1)~3.3배(예측값 2)임.

□ 보육교사 수급의 적절성 해석의 유의점

- 공급규모 해석의 유의점
 - 본 연구에서 추정된 공급규모는 추정 방법 상 공급과소추정의 여지가 있음. 즉,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보육관련 유사학과의 경우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에서 정보가 누락된 학과가 있으며, 각 학과의 보육교사

자격소지자 수 보고에서 복수전공 등을 통한 타학과생에 관한 보고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서문희(2005)가 2004년도 현재 양성기관의 졸업생수를 근거로 추정된 보육교사 자격자 수를 보면, 대학교(방송통신대학 포함)와 전문대학의 관련학과¹¹⁾ 졸업생과 보육교사 교육원 수료생을 합한 수는 64,267명이며, 핵심학과 졸업생과 보육교사 교육원 수료생을 합한 수는 27,028명임. 이 수를 본 연구에서 추정된 공급규모인 33,700명과 비교해서 보면, 핵심학과를 근거로 한 규모를 상회하며 관련학과를 근거로 한 규모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보육관련학과와 핵심학과 졸업자 중 보육교사 자격소지자 수에 관한 파악은 어려우며, 다만 핵심학과의 졸업자수의 대부분, 그 외 관련학과 졸업자의 일부가 자격소지자로 추정된다는 서문희의 논의와 일관되는 것임.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추정되는 33,700명 규모는 연도별로 배출되는 보육교사수의 최소치로 볼 수 있으며, 과소추정의 가능성과 관련학과 졸업생수를 근거로 한 6만명 이상의 규모를 고려할 때 4만명을 상회하는 규모로 추정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교 및 전문대학 보육교사 자격 부여방식이 개방형체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보육교사 배출 규모의 추정으로, 보다 정확한 공급규모 파악을 위한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에 관한 자료 구축이 시급함.
- 수요규모 해석의 유의점
 - 퇴직률을 이용한 추가수요규모 산출 시 관련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유치원의 퇴직률을 이용하였으므로, 실제 보육교사의 추가수요규모가 본 연구에서 추정한 규모와 상이할 수 있음. 보다 정확한 수요규모 파악을 위한 보육교사의 퇴직률 또는 이직률에 관한 자료 구축이 시급함.

IV.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

□ 정책대안을 위한 기본 방향

-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은 수급, 전문성, 자격제도 측면에서 모색하였으며, 교사자격의 일원화제도를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하였음.

11) 아동복지학과, 가정학과, 초등교육학과, 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사회사업학과, 가정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보육학과 등 13개 학과

1. 유치원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육아지원기관의 교사수요에 맞춘 유치원교사의 배출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근거

- 유치원교사의 수요와 공급 예측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공급 규모가 유지된다면 향후 2020년에 유치원교사의 공급은 수요의 수배에 이를 정도로 과잉 현상을 보이게 될 것임.
- 종일제 프로그램의 확산, 보조교사 활용, 법정 학급당 유아수 기준 조절 등과 같은 정책과 유치원교사의 보육시설 근무 활성화는 유치원교사의 수요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즉, 유치원교사 자격 소지자가 보육시설 교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 유치원에서의 종일제 프로그램의 확산에 따른 유아교사 수요 증가,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충실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보조인력 활용, 시도별 법정 학급당 유아수의 하향 조정 등에 따라 유치원교사의 수요 규모는 현재 추정된 수치보다 훨씬 높거나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재 유치원교사의 양성기관 졸업자수 추이를 보면 공급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점차 줄어드는 취학전 연령 인구수와 이에 따른 취원아수 감소, 그리고 3~5세 유아의 보육시설 병행 취원 및 취원을 상승 추세를 감안하다면 결국에는 유치원교사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유치원교사의 적정 공급에 대한 장기 대책이 요구됨.

◦ 과제

- 현재 유치원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양질의 유치원교사를 수요에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교사의 양성과정 내용을 보완하여 표준양성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함.

◦ 근거

- 유치원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중 교양과목은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므로 중요함. 그러나 현재 전문대학의 교양과목 시수가 4년제 유아교육학과 및 초중등교사 교양과목 시수에 비해 비중이 낮으므로, 이를 4년제 대학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각급학교 교사와 동등한 교직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 교직과목을 통해서도 교육학 관련 기초과목들과 교수방법 및 학습에 관한 이론 등 교사로서 필요한 지식의 기초를 습득할 수 있음. 그러나 초·중등 교사 양성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직과목이 실제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의 내용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또한 본 연구 조사결과에서 다수의 전문가가 현재의 다양한 양성기간과 과목을 표준화하는 양성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됨.

◦ 과제

- 국가 수준에서 표준화된 내용과 구성을 제시하는 표준양성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양성교육기관간의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내용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지식의 기초를 분명하게 규명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체계화하여야 함.

□ 유치원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함.

◦ 근거

- 취학전 유아를 교육하는 교사는 각급학교 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전문성을 유지해야 함. 따라서, 유치원교사도 최소한 초·중등 교사와 동일한 수준의 학력인 4년제 대학 졸업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양성과정의 적절한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4년을 바람직한 기간으로 제시한 바 있음(조형숙 외, 2004; 서영숙 외, 2005). 또한 본 연구에서도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유치원교사의 수업연한으로 동일하게 4년을 가장 많이 꼽음.

◦ 과제

-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의 수업연한을 조정하여 학력을 고양시켜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대학에서의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의 양성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4년의 수업연한을 지향하되, 전문대에서 배출되는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기준 강화 방안이 요구됨.
- 자격취득 후의 학력고양을 유도함. 즉, 현재 3년제로 개편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서 배출하고 있는 교사에게는 졸업 후 심화학점이나 연계 학점제를 통해 4년제에 해당하는 학점을 추가 취득하도록 함. 이를 위해 4년제 학사학위 이후 정규 2급 정교사로 전환되도록 하는 방안이나, 1급 정교사 연수를 위해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추가 학점 이수를 요구

하는 등 상위 자격 취득 조건을 통해 학력고양을 유도함.

- 수업연한에 따른 자격증의 구분 또는 역할구분이 요구됨. 즉, 동일 자격 급수 내에서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에서 배출된 신입교사의 경우 일정기간의 현장경력 후에 담임교사를 맡도록 하거나, 수업연한에 따른 호봉 차이 뿐 아니라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현장 경력을 차등 요구함으로써 급수의 실제적인 세분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사립유치원교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됨.

◦ 근거

- 전반적으로 유치원교사의 근무여건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조사되기는 했으나, 유치원교사집단 내에서 공립과 사립유치원간의 근무여건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제

- 이러한 낮은 근무만족도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유치원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낮추게 되고, 결국에는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무엇보다도 시급히 기관 유형간에 발생하는 교사의 근무여건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함.

2.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 보육교사의 공급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구축이 필요함.

◦ 근거

- 본 연구에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공급규모 추정은 보육관련 유사학과만을 대상으로 했음. 이로 인해 유사학과에서 보고한 배출현황에 타학과에서 진입하는 공급규모의 추정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에서 배출하는 보육교사의 공급규모는 과소추정의 여지가 있음.

◦ 과제

- 이후 보육교사의 정확한 수요와 공급의 통계자료를 통한 관련정책 수립을 위하여 보육교사 퇴직율 또는 이직율, 신규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수, 연도별 자격증 발급수, 자격증 취득 학과 또는 기관, 최종 학력 등과 같은 기초적인 자료 구축, 기존 자료 cleaning 작업 및 전산화 작업이 요

구됨.

-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이 개별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 구축이 어려운 만큼, 정확한 공급규모 파악을 위해 보육실습과목 수강 및 이수자 수와 같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보육교사를 과잉 배출하고 있는 보육교사 양성기관 및 대학의 역할전환 및 평가를 실시함.

○ 근거

- 보육교사의 경우 자격기준이 너무 낮아 보육관련 유사학과 이외의 기타 전공자의 진입이 매우 쉬우므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수준이 저하되며, 수요규모에 비해 배출규모가 너무 커져 수급 불균형의 정도가 심각함.

○ 과제

-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측면과 보육교사 배출자수 측면에서 볼 때 1년 양성과정만으로 보육교사 3급을 배출하는 보육교사교육원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육교사교육원을 양성기관이 아닌 재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전환함으로써 낮은 학력으로 배출되는 전문성이 낮은 교사의 과잉공급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요구됨. 단, 보육교사 보수교육의 경우 그 경비를 국가가 보조하므로, 재교육기관으로 전환 유도시 기존의 보육교사교육원이 보수교육을 담당하기 적절한지에 관한 기관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싸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의 경우 학사관리 운영 및 실습과목의 요식화 등으로 교사양성기관으로서의 정상화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이를 통해서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것은 문제임. 이에 원격대학에서의 자격증 발급을 제한하는 대신, 전문대학 또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배출된 기존 교사의 학력고양을 위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영아보육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여 영아담당 보육교사 양성을 준비해야 함.

○ 근거

- 향후 교사 수요의 예측 결과, 인구 감소에 따라서 유치원교사의 수요는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보육교사의 수요는 인구 수 감소보다는 덜 급격한 것으로 보임. 이는 0~2세 아동의 육아지원 요구의 급격한 증가가 3~5세 아동의 육아지원 요구의 감소를 완충한

것으로 해석됨. 즉,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교사 양성시 영아와 관련된 교과목 증설이 필수적임.

◦ 과제

- 영아 보육의 수요 증가와 정부의 영아 보육 확대 의지가 확고한 만큼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관련 교과목에 영아 관련 교과목과 유아 관련 교과목을 세분화하고, 각각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표준양성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함.

◦ 근거

-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전공학과 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바뀌면서 학과에 상관없이 기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형 체제로 조정하였음. 본 연구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영유아를 위한 교사는 학과 중심으로 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현재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학부제로 변화하는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학과 중심의 양성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넘어선 사안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의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은 62학점에서 108학점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경우 개방형 체제 하에서도 자연스럽게 학과 중심의 양성이 가능해질 것임.

◦ 과제

- 양성과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보육관련 전공과목을 늘리고, 보육교사에게 적합하도록 조정된 교양과목을 보완해서 변화하는 사회에서 보육교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양성대학 표준양성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함.
- 교직과목의 이수는 교사 양성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위한 이수교과목에서 배제되어 있음. 따라서 영유아와 관련된 교직과목을 현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새로운 제 7영역으로 추가하여 보육교사 또한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과 소양을 갖추도록 함.

□ 보육실습 이행을 확인하고, 강화해야 함.

◦ 근거

- 보육실습은 숙련된 교사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숙련된 교사의 교수기술을 모방하고 이론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기회를 갖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 과제
 -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등에서 배출되는 경우 보육실습 운영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음.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최종 단계의 심각한 문제인 보육실습 이행과 내용이 부실하거나 위조된 경우 해당 학생 뿐 아니라 관련 보육시설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는 등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 또한 보육실습을 학점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과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적인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절해야 함.
 - 근거
 -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와 관련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최저 학력을 2년으로 보고 있음. 또한 교사 대상의 전문성수행 수준 평가 결과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일 때 보육교사의 전문성수행 수준이 높았음.
 - 점차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역할이 유사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도 유치원교사의 학력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조절 되어야 함.
 - 특히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으로 대부분이 3년제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됨.
 - 과제
 - 보육교사교육원의 기능을 보수교육기관으로 전환하여 3급 보육교사의 배출을 조절하는 방안을 단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급 보육교사의 역할을 보조교사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됨.
 -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향조정은 추후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일원화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기본 토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육교사의 전문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여건 개선 및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 근거
 - 교사의 근무여건과 재교육 기회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급여, 복

지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유치원교사에 비해 매우 낮음.

-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 경험도 유치원교사의 경우는 다수가 재교육을 받았으나 보육교사는 5명 중 1명만이 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과제

- 이상의 실태 결과를 볼 때 보육교사의 근무여건과 재교육의 기회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보임.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육교사의 급여수준 및 호봉체계 조절, 시간외 수당 지급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3.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일원화 방안¹²⁾

- 육아지원인력의 일원화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격의 일원화 방안을 발전적으로 마련해야 함.

◦ 근거

- 교사제도의 통합을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한 연구(이옥 외, 2006)에서도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동일화하여 격차를 없앤 후,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교사자격에 관계없이 상호고용을 이룸으로써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에 관한 조정을 거친 다음에 자격제도의 일원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실현가능성 있는 교사 통합의 과정으로 제시한 바 있음.
- 본 연구 조사결과에서도 전문가의 대다수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 및 자격기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그러나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각각이 교사와 관련하여 풀어야 할 내부적인 과제가 상당히 많은 실정임.

◦ 과제

- 영유아를 위한 교사의 일원화는 무엇보다도 양성과정과 자격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자격제도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육아지원인력의 자격일원화를 위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찬성한 표준화된 양성교육과정 개발, 보육교사 자격기준의 상향 조정 등 선결과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요구됨.

12) 부록의 <부표 7> 참조

□ 육아지원인력의 자격일원화를 통하여 전문성 제고를 이룸.

◦ 근거

- 본 연구의 육아지원인력 수급 결과를 보면, 현재 배출되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공급규모는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수요규모를 심각하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양성 및 자격기준의 조정을 통한 공급조절이 일정부분 요구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 공급조절에 있어서의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양성기관을 제한하거나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임.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전문가가 1년의 수업연한은 교사 양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보았으며, 과반수의 전문가가 취학전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자격일원화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력으로 4년제가 적정하다고 보고함.

◦ 과제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일원화 과정에서의 그 방향은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에 두어야 할 것임.
- 수업연한 등으로 대표되는 육아지원인력의 자격기준을 동일하게 상향조정함으로써 자격을 일원화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급조절을 꾀하는 것이 요구됨.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기준이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재교육과정 등 교사의 자격 일원화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학계 간의 합의점을 찾는 절차가 시작되어야 함.

부록

〈부표 1〉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수준과 관련요인

단위: 점, %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전문성 수행수준 ¹⁾	전체	3.20	3.10
	자기개발	3.13	2.99
	자율성	3.22	3.16
	책임성	3.38	3.34
	교육/보육프로그램	3.03	2.94
	교육/보육신념	3.48	3.37
	운영관리	-	-
	인사관리	-	-
지역사회와의 협력		-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주요인 ²⁾	근무여건 및 처우	34.9	59.8
	개인적 자질	30.8	39.3
	사회적 인정	20.0	22.6
	재교육과정	26.1	11.0
	자격기준	11.9	14.6
	양성기관	10.8	6.4
전문성 수준에 대한 전문가 인식 ²⁾	높다	44.4	12.2
	낮다	55.6	87.8

주: 1)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임.

2) 표 안의 수치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률임.

〈부표 2〉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제도에 대한 의견

단위: %

	유치원교사 양성과정	보육교사 양성과정
양성과정의 적절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수업연한 및 졸업이수학점 88.2 -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학점 90.0 - 교양·전공·교직의 비율 75.5 - 전공과목 구성 및 내용 91.8 - 실습운영 83.6 - 교수진의 전문성 87.3	<전문가 의견> - 78.5 - 83.3 - - - 79.6 - 83.3 - 87.6
	<교사의견> - 수업연한 및 졸업이수학점 77.3 -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학점 85.2 - 전공과목 85.7 - 실습운영 70.1 - 교수진의 전문성 77.0	<교사의견> - 86.9 - 89.0 - 86.8 - 76.4 - 83.2
양성교육과정 중 강화되어야 할 영역	- 실습 27.3 - 교양 26.4 - 전공필수 21.8 - 전공선택 13.6 - 교직 10.9	- 영유아교육 35.6 - 발달 및 지도 28.2 - 보육실습 18.1 - 보육기초 12.8 - 건강·영양·안전 9.6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5.3
적정 수업연한	<전문가> <교사> - 1년 0.9 - 2년 1.8 3.9 - 3년 20.9 21.3 - 4년 71.8 66.5 - 대학원 5.5 7.4	<전문가> <교사> - 3.2 8.3 - 27.8 39.5 - 31.0 38.4 - 37.4 12.4 - 0.5 1.4
양성학과평가	- 유아교육특성에 맞는 평가로 대체 40.0 - 현행 평가로 충분 25.5 - 유아교육특성에 맞는 별도 평가 필요 20.0 - 현행 평가 강화 14.5	- 30.5 - 24.2 - 27.4 - 17.9
표준화된 양성교육과정	- 필요하다 88.2 - 필요하지 않다 11.8	- 94.7 - 5.3
양성방법	- 양성학과 중심 90.0 - 관련과목 이수자로 개방 4.5	- 82.5 - 14.3
자격증 세분화의 필요성	- 필요하다 80.2 - 필요하지 않다 19.8	- 81.6 - 18.4
자격 부여방식	- 이수학점/성적 일정기준 이상인 자 42.7 - 국가고시 26.4 - 무시험 자격검정 방식 19.1 - 평가인증을 받은 학과/기관의 졸업생 6.4 - 적성 평가 후 1.8	- 46.3 - 20.5 - - - 26.8 - 4.2
자격증 갱신방안의 필요성	- 필요하다 76.4 - 필요하지 않다 23.6	- 76.8 - 23.2

주: 표 안의 수치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률임.

〈부표 3〉 연령별 유치원 취원율 및 보육시설 이용률 예측값(2006년~2020년)

단위: %

연도	유치원			보육					
	3세	4세	5세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06	16.38	32.66	47.38	10.02	21.24	39.18	47.21	39.82	31.69
2007	17.76	35.31	47.57	12.48	23.61	41.40	51.59	44.31	33.58
2008	18.60	36.95	47.74	14.61	25.75	43.09	54.08	47.57	35.26
2009	19.35	38.21	47.92	16.31	27.63	44.39	56.22	49.96	36.83
2010	20.02	38.92	48.15	17.65	29.28	45.41	57.94	51.85	38.10
2011	20.60	39.23	48.44	18.72	30.73	46.24	59.33	53.23	39.43
2012	21.10	39.28	48.75	19.63	32.01	46.96	60.48	54.24	40.69
2013	21.52	39.17	49.07	20.42	33.17	47.59	61.45	55.02	41.86
2014	21.87	38.96	49.35	21.13	34.23	48.16	62.28	55.67	42.94
2015	22.15	38.70	49.58	21.80	35.21	48.70	62.97	56.25	43.92
2016	22.38	38.40	49.75	22.43	36.14	49.22	63.56	56.77	44.81
2017	22.56	38.08	49.84	23.03	37.03	49.72	64.08	57.26	45.62
2018	22.69	37.76	49.88	23.62	37.90	50.20	64.53	57.72	46.35
2019	22.79	37.45	49.88	24.20	38.75	50.68	64.92	58.16	47.01
2020	22.86	37.10	49.84	24.76	39.59	51.15	65.26	58.60	47.61

〈부표 4〉 연령별 유치원 원아수 및 보육시설 아동수 예측값(2006년~2020년)

단위: 명

연도	유치원				보육							
	3세	4세	5세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	
2006	78,324	167,540	281,263	527,127	47,474	101,088	186,873	225,751	204,271	188,099	953,556	
2007	84,587	168,557	243,617	496,761	58,583	111,189	196,597	245,665	211,518	171,967	995,519	
2008	88,181	175,672	227,444	491,297	68,105	120,081	202,442	256,329	226,114	167,987	1,041,058	
2009	90,762	180,823	227,397	498,982	75,634	127,979	206,567	263,640	236,435	174,776	1,085,031	
2010	93,004	182,208	227,441	502,653	81,318	134,890	209,862	269,132	242,732	179,984	1,117,918	
2011	95,040	181,921	226,373	503,334	85,392	140,660	212,554	273,711	246,822	184,262	1,143,401	
2012	96,806	180,916	225,671	503,393	86,918	145,040	214,454	277,528	249,777	188,343	1,162,060	
2013	98,113	179,433	225,572	503,118	88,316	145,906	215,156	280,176	252,037	192,414	1,174,005	
2014	98,696	177,345	225,657	501,698	89,014	147,063	211,384	281,068	253,402	196,319	1,178,250	
2015	97,067	174,370	225,264	496,701	89,242	147,327	208,785	275,885	253,402	199,548	1,174,189	
2016	95,788	167,952	223,732	487,472	89,370	146,987	205,485	272,033	248,320	201,508	1,163,703	
2017	94,023	162,709	217,619	474,351	89,713	146,601	201,766	267,076	244,653	199,194	1,149,003	
2018	91,939	157,127	212,743	461,809	90,492	146,654	198,288	261,417	240,172	197,679	1,134,702	
2019	89,885	151,449	207,161	448,495	91,819	147,486	195,662	255,989	235,212	195,248	1,121,416	
2020	88,129	146,058	201,198	435,385	93,673	149,250	194,252	251,555	230,699	192,210	1,111,639	

〈부표 5〉 교사수 예측을 위한 예측변수값 (2005년도 기준)

단위: 명

지역	유치원					보육						예측 변수 2	
	예측변수 1			예측 변수 2	예측 변수 3	예측변수 1							
	3세	4세	5세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서울	20	30	30	20.13	24.30								8.63
부산	19	27	29	18.47	27.31								10.16
대구	20	28	32	23.53	29.47								10.14
인천	25	30	32	23.85	26.37								10.22
광주	20	25	30	19.44	25.85								9.63
대전	15	25	30	22.06	25.60								7.47
울산	27	27	30	21.61	25.79								9.68
경기	20	30	35	22.75	25.92	3	5	7	15	20	20		9.22
강원	16	23	28	19.59	20.85								12.19
충북	18	27	27	19.80	21.82								11.34
충남	27	27	27	19.07	20.27								12.05
전북	18	23	28	16.47	17.92								10.12
전남	27	27	27	17.61	19.52								11.64
경북	20	25	30	19.10	22.41								10.46
경남	20	25	30	19.01	23.69								9.66
제주	33	33	33	21.95	23.87								10.42
전국				20.45	24.17	3	5	7	15	20	20		9.73

〈부표 6〉 유치원교사수 및 보육교사수 예측값(2006년~2020년)

단위: 명

연도	유치원교사수			보육교사수	
	예측값 1	예측값 2	예측값 3	예측값 1	예측값 2
2006	21,772	19,096	25,720	97,443	97,945
2007	20,496	18,179	24,216	105,445	102,660
2008	20,223	18,066	23,898	112,468	107,671
2009	20,477	18,344	24,206	118,495	112,545
2010	20,554	18,484	24,317	123,180	116,261
2011	20,535	18,522	24,307	126,808	119,147
2012	20,499	18,539	24,284	129,065	121,284
2013	20,460	18,542	24,249	130,296	122,684
2014	20,378	18,497	24,164	130,546	123,238
2015	20,159	18,293	23,915	130,124	122,885
2016	19,772	17,949	23,463	129,213	121,824
2017	19,235	17,474	22,824	128,086	120,291
2018	18,718	17,016	22,214	127,184	118,781
2019	18,177	16,528	21,568	126,687	117,367
2020	17,645	16,052	20,932	126,781	116,314

〈부표 7〉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 일원화에 대한 의견

단위: %

양성 및 자격제도 통합의 필요성	- 필요하다 82.0 - 필요하지 않다 18.0
일원화시 선결과제	- 자격제도의 일원화 51.3 - 양성과정의 일원화 21.2 - 근무여건의 균등화 11.6 - 기존교사의 재교육 7.9 - 기존교사의 학력고양 6.9
일원화시 우선적으로 일원화할 사항	- 자격증 관리부처 35.6 - 양성교육내용 28.7 - 수업연한 17.0 - 양성대학 및 기관 15.4
적정 학력	- 1년 1.1 - 2년 15.5 - 3년 26.7 - 4년 56.7
표준양성교육과정의 필요성	- 필요하다 93.1 - 필요하지 않다 6.9
자격부여 방식	- 특정학과 졸업 후 무시험 검정 54.5 - 일정 교과목과 학점 이수 후 국가고시 20.6 - 일정 교과목과 학점 이수 후 무시험검정 19.0 - 특정학과 졸업 후 국가고시 5.8
자격별 역할구분의 필요성	- 필요하다 48.4 - 필요하지 않다 51.6
자격전환 방식	- 해당학력 취득 후 기존직급과 동일하게 전환 45.6 - 연수 제공 후 기존직급과 동일하게 전환 42.2 - 기존직급과 동일하게 일괄 전환 11.1

주: 표 안의 수치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률임.

본 문

서 영 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지 성 애 (전남대학교 교수)

최 남 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장)

[전문성 측면에서 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과제와 전망] 에 대한 토론

서 영 숙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교수)

이 주제는 보육과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는 관련 학계와 학생, 현장의 교사와 기관장 뿐 아니라 아동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목할 주제일 것입니다. 특히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양육이 더 어린 시기부터 시작되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양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교사의 전문성은 단순히 한 가정이나 한 육아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연구자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육아지원인력으로 통칭하며, 육아지원인력 수급 전망과 이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목적의 순서를 따라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 육아지원인력 수급 전망과 해결 방안

가. 육아지원인력 수급 전망

유치원교사의 수급전망에서 연간 유치원교사의 신규 수요는 약 1,289명~1,533명이며 공급규모는 약 10,000 명으로 약 6.5배~7.8배의 공급초과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수급전망의 적절성 해석의 유의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만한 내용이라고 본다. 여기에 퇴직교사의 재취업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로 전환하는 과와 유아교육과에서 다른 과로 전환하는 과의 학생정원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수급전망에서 연간 신규 수요는 10,313명~11,570명으로, 공급은 33,700명으로 약 2.9~3.3배의 공급초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여기서도 이런 수급의 적절성 해석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공급규모에 과소추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4만 명을 상회하는 규모일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그런데 본 토론자는 서문희(2005)의 연구에서 관련학과 졸업생 수 64,267명과 여기에 포

함되지 않았던 사이버대학이나 대학원의 관련 학과와 학점은행제 아동학과 등 관련학과의 신설로 생기는 졸업생 수를 더하면 그 규모는 비록 보육교사교육원 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65,000명 이상이라고 본다. 또 연구자도 지적한대로 보육교사 자격증이 과목이수 여부로 주어지므로 보육 관련학과가 아니어도 과목이수만으로 자격증을 가질 수 있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 가능자의 수는 사실상 예측하기 어려운 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실제 두 육아지원인력의 수급 실태를 단순 더하기 식으로 계산하면 수요는 11,602명~13,103명이며 공급규모는 약 43,700명~75,000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으며 유치원교사 자격증 발급학과는 대체로 보육교사자격증 발급 학과로 될 수 있다고 보아 유치원교사 신규공급규모인 10,000명을 제외한 신규 공급규모는 약 33,700명~65,000명 이상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약 3~5배 이상의 공급초과가 있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나. 해결방안

이런 공급초과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연구자는 양성기관 제한과 자격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1년 과정으로 되어있는 보육교사양성원의 기능을 전환시켜 기준이 충족될 경우 재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과 궁극적으로는 두 육아지원인력의 학력을 4년제 대학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및 육아지원 관련 전공과목 이수 학점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이런 연구자의 제안은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많은 논의를 거쳐 지금의 자격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공급과잉 뿐 아니라 낮은 자격 기준 설정으로 전문성 문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이수학점을 상향 조절하거나 관련 학과 중심의 전문가 양성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향상된 자격기준에 의한 4년제 대학 졸업 자격증 소지자가 지금처럼 근무여건 열악 등의 이유로 아예 실제 현장에 근무하지 않거나 쉽게 그만 둔다면 육아지원기관은 누가 책임지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아지원인력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인데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 현실이다. 육아지원인력이나 전문가

대상 조사연구에서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모두 근무여건 및 처우를 첫째로 지적하고 있으나 연구자도 근무여건 향상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선언만 하고 있는 점에서 그 답답함을 읽을 수 있다.

토론자는 공급초과 해결방안으로 자격시험제도 도입과 현장실습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시험이 전문성을 반드시 담보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시험도입에 따른 많은 경비 등 제반 여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격시험제도 도입 제안은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관련 학과의 개념이 없이 과목 이수여부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1급 자격증 취득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등, 전문가 자격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시험을 통해 사회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공급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육아지원인력의 자격증 시험 제도는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육아지원인력은 어린 아동의 어떠한 의사표현에도 적절히 반응하고 또 새로운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하는 전문가이며, 또 그 영향력이 결정적일 수 있으므로 충실한 현장연수를 통해 처음부터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각 연령대의 아동이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상당 수준의 육아지원 전문 인력이 갖추어진 기관에서 실습해야 할 것이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처럼 충분한 검증을 받은 기관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실습현장의 조건을 강화하고 실습내용의 충실성을 보장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공급조절과 더불어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습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도 상당한 부분 언급한 바 있다.

2.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향상 방안

연구자는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4년제 대학수준으로 할 것과 표준양성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업연한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문대학에서 배출된 신입 교사의 경우 일정 기간의 현장 경력 후 담임교사를 맡도록 하거나 호봉 차 뿐 아니라 1급 승급 기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수업연한에 대한 차이를 실질적으로 고려한 조치라 여겨지나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논의를 거쳐야 할 사인이라고 본다. 특히 현장 경력 후 담임채용안은 운영비 또는 실습비 부담을 가지는 안으로 이로 인해 기관장의 부담의

추구나 예비담임교사의 신분상의 불이익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보육교사의 경우 1년 과정으로 보육교사 3급을 배출하는 보육교사 교육원과 학사관리 운영 및 실습과목의 요식화 등의 가능성을 지닌 원격대학의 교사양성기관으로서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전환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우리가 솔직하게 직면해야 하는 용기 있는 제안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보육교사교육원의 보육교사 양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을 거쳐 결국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토론자도 우리대학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이 교육원이 사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뒤늦게 자신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생의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수학하는 곳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들 중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새로운 전문직에 도전하기 위해 학비가 저렴한 교육원을 택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연한이 1년이라는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원의 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의 적절한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평가하여 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교육원 수료자에게만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현장에서 상당 비율의 보육교사가 교육원 출신이라고 볼 때 이미 보육교사로 역할하고 있는 교사들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직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교육으로 지원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연구자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직이수를 포함한 보육전공 관련 이수학점 상향조절을 제안하였다. 이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절실한 과제라 보아 찬성한다. 다만 사범대학 계열이 아닌 대학에서는 교직과목 이수를 교양학점으로 이수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유치원교사의 교직과목 문제점에서 다룬 것처럼 육아지원과 관련된 교직과목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표준양성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학력의 상향조절과 더불어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증 통합과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제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유치원교사가 보육교사는 할 수 있어도 보육교사가 유치원교사로 될 수는 없는 불평등한 자격증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유치원교사 자격증은 각급 학교 교원으로 교직을 이수하는 사범대학계 출신에게 발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육교사 배출 학과가 아무리 이수학점을 향상하고 표준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해도 사범계열의 학과가 아니면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모든 통합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모래 위에 온갖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다름없

다고 본다.

양육지원인력 양성에서 현행 유아교육과 교육과정과 보육교사 양성 학과의 교육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표준양성과정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우리가 더욱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4년제 유아교육과와 보육교사 양성학과의 교과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과의 교육과정은 아동을 집단적으로 교육하는 데 유능한 교사, 교육기관의 관리에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는데 유리하다고 본다. 반면 보육교사 양성학과는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개별 아동, 어려움을 가진 아동을 지도하는데 유능한 교사, 육아지원 관련 지역사회자원의 연계나 동원에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는데 유리하다고 본다. 유아교육과는 교과영역별 교육과목이 많다. 유치원표준교육과정에서 명기하고 있는 대로 유아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결국 이들 과목들이 내용상 상당한 중복이나 유사성이 많은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 교직과목까지 더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표 1>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교육과정의 예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공필수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발달		유아교육과정	
전공선택	유아연구 기악I	인지이론과 교육 놀이이론과 교육 유아문학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교육 유아음률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건강교육	유아교수매체 유아관찰 유아교육사상 아동복지 부모교육 유아컴퓨터교육
대학공통기초	교육심리 교육사회학	교육사 교육철학 교수공학 및 방법 교직선	교육과정 및 평가 교과지도법	교육실습

〈표 2〉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영역	교과목 명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 필수
전체	12과목이상, 35학점이상	

비고:

- 1) 교과목 명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3. 맺는 말

육아지원의 기능이 돌봄, 배움, 채움, 보탬, 살림이라는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이들 학과의 교육과정은 각각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두 육아지원인력 양성학과의 이수학점을 항상 조절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목과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목을 서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런 전제 아래에서 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문성 측면에서 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토론

지 성 애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육아지원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관련법과 소관부처의 이원화, 육아지원 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자격기준의 이원화,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으로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영유아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가 사회적으로 재정적인 낭비와 손실이 많다는 발표 내용에 토론자도 공감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가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우리나라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그러나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영유아 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양성교육과정 구축, 자격의 일원화 등 급진적인 개혁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원화된 현 체제에서부터 순차적 발전 방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발표원고는 다양하고 적절한 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성 제고 방안은 1)유치원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2)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그리고 3)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일원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발표자가 제시한 방안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수급계획, 양성교육, 자격제도, 그리고 자격일원화와 관련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하고자 한다.

1. 수급 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저 출산율은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취원아 수 감소와 연결되어 육아지원인력의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육아지원인력 양성기관 역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각 대학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는 학생모집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그동안 많은 대학에서 학생모집이 보다 수월한 육아지원인력 양성학과를 속속 설립하였다. 특히 보육교사 자격 부여 방식이 개방형체제로 전환된 이후 ‘전공’ 과 상관없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학 졸업

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학생모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학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 난발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발표자는 개방형 체제로 보육교사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공급 예측에 제한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서 개방형 체제로 보육교사 양성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뿐 아니라 적정 공급에 대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학과’ 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학과 중심으로 양성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고 발표원고에서도 밝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농어촌지역에서는 보육교사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육교사들의 농어촌 보육시설 근무 기피로 농어촌 지역보육시설에서는 보육교사를 구할 수 없어 무자격 보육교사를 고용하는 시설도 많다. 따라서 육아지원인력 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급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표자는 전반적으로 유치원교사의 근무여건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으나, 공립과 사립 유치원간의 근무여건은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간과 법인에 따라 그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보육시설 유형(국공립, 법인, 민간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근무여건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을 유지 또는 함양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에 따른 육아지원인력의 근무여건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 또한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방안보다 사립유치원교사의 전문성 유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교사 수당의 일부분을 국가가 보조하는 등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담당하는 수와 비례하여 보육교사 인건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 실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표자는 유치원 교사의 수요 확대를 위해 유치원 종일반의 확산, 다양한 보조교사의 활성화, 학급당 유아수 하향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학제개편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더욱 심도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양성교육

유치원교사 양성과정 중 교양과목 시수가 전문대학이 4년제 유아교육학과 시수보다 낮으므로 상향조정하고 교직과목도 유아교육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하여 교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양성교육기관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국가 수준의 ‘표준양성교육과정’을 체계화해야 함을 발표자는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은 2년과 3년의 전문대학과 4년제의 대학교로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양성교육기관 간 수업연한의 편차가 있는 현 상황에서 4년제 기준으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표준양성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한 필수 교과목을 지정하여 양성기관에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절충적 방안을 먼저 고려하고 점진적으로 양성교육기관 간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표준양성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의 이수학점을 참고하여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이수학점을 상향조정하고 교직과목을 새로운 제 7영역으로 추가해야 함을 발표자는 주장하였다. 물론 본 토론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영아보육의 수요 증가로 영아관련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발표자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국가 정책 및 사회 변화 그리고 보육교사의 자격과 역할을 고려하여 새롭게 추가 또는 강조해야 할 교과목들을 체계화하여 조직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아울러 발표자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표준양성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기관이 다양하고 수업연한 또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양성교육과정’은 유치원교사 ‘표준양성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보다 더 많은 변인과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보육교사 양성기관간의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교과목 위주의 개방체제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유치원교사 양성과 마찬가지로 표준양성교육과정 운영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자격제도

많은 국가에서 취학전 영유아교육 및 보육을 위한 교사양성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에 시작되어 과거 20년 이상에 걸쳐 양성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수업연한을 상향조정하였다(OMEP 日本委員會譯, 2004). 다음

의 표는 유럽연합 국가의 육아지원인력의 수업연한 비교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	양성기간	담당가능한 연령	초등학교 교사 임용 가능
핀란드	3	0-7	否
프랑스	5	2½-11	可
아일랜드	3	4-11	可
스웨덴	3	0-7	否
스페인	3	0-6	否
영국	4	3-11	可
이탈리아	4	3-6	否

(OMEP日本委員會譯(2004.) ヨーロッパの 保育と 保育者養成. 大阪公立大學共同出版會 p25)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2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2001년에 「고등교육법」(제 48 조) 및 동법 시행령(제57조)을 개정하고 2002년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유치원 교사 양성의 축을 3-4년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유치원교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근무조건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발표원고에서도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으로 대부분이 3년제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선례가 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2006년 3월부터 학생모집이 어려운 경우 3년제를 2년제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공문을 교육인적자원부가 3년제 유아교육과에 전달한 바 있으며, 2년제로 전환한 선례들도 있다. 이러한 전환은 결국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재 유아교육과의 수업연한은 2,3,4년제로 구분하고 있으나 졸업 후 동일한 자격증이 부여된다. 이에 유치원교사 양성 수업연한에 따른 자격증 구분 또는 역할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발표자는 지적하였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1,2,3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보육현장에서는 어떠한 차등도 없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 자격에 따른 차등과 역할구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보육교사들에게 실시하는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승급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승급 또는 기타 인센티브와 연결하는 보수 및 직무교육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장학지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자격일원화

발표자는 육아지원인력의 일원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의 일원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본 토론자도 이에 동의한다. 자격 일원화는 육아지원체계 관련법과 소관부처의 일원화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표준양성교육과정’을 구축하여 양성교육 체계가 일원화되면 순차적으로 자격일원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너무 멀고 먼 산일 수 있다. 발표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교사자격에 관계 없이 상호고용을 통한 교사통합의 과정을 통해 자격제도의 일원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다 하였다. 의견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의 59.3%가 유아교육전공자인 것으로 발표 원고에 이미 지적하였고,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과반수 이상이 유아교육 전공자들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 제시되어 있으며, 기타 통계자료에도 제시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원과 보육 교사 통합을 이루는데 내부적 과제가 상당히 많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이 유치원과 보육 교사를 통합하여 자격 일원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시발점이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자격제도 강화와 표준화된 교육과정 구성 그리고 자격의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많은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자가 제시한 과제와 방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추가 연구 및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결과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됨으로써 양질의 육아지원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

전문성 측면에서 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최 남 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장)

높은 전문성의 교사역할이 요구되는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의 특성상 교사의 전문성 제고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좌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과 보육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보면 교사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 이런 현실적 문제의식에서 본 토론회가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발제자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관련 요인으로 양성과정, 자격기준, 수요와 공급, 재교육과정, 근무여건을 들었으며,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중장기교사 수급 계획, 표준 양성과정, 자격기준 강화,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각각 제시한 후 자격일원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교사들의 전문성을 위협하는 요인과 그 해결방안으로 유보 통합, 공공성 강화,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교육과정, 시설과 기관간의 과열경쟁 등을 빼놓을 수 없으나 본 토론문은 발제자가 제시한 유치원교사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1. 교사 수급 불균형 개선

현재 공·사립유치원교원 수는 3만 여명. 한 해 1만 명이 배출되는 유치원예비교사 수에 비해 심각한 불균형 상태이다. 2007년 공립유치원의 신규교사 임용고시 경쟁률이 평균 14.4대 1, 서울은 60대 1로 예비교사의 공립임용은 바늘구멍 통과만큼이나 어렵다. 사립유치원의 취업도 신규 및 누적된 예비교사 군으로 인해 전쟁이기는 마찬가지다. 유치원교사의 공급과잉은 비정규직 신분의 보조교사 또는 보조원이 대부분 정교사 자격증소지자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교사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은 비정규직 양산,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여건, 공립임용고시의 과다 경쟁 유발, 높은 이직률과 채용의 악순환을 초래해 교직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이는 유치원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장기 적정 교원수급 인원추정과 그에 따른 적정한 양성체제 구축은 시급하다. 2006년 교육부는 초·중등교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

립하면서 유치원을 제외하여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후 중장기교원수급 계획 수립 시 근거자료로 종일제전담교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학제화를 고려하여 3-5세 대상 전체 유아수를 근거로 수급인원을 추정해야 한다.

2. 표준양성과정을 통해 교사의 질적 차이를 극복해야

발제자가 밝힌 대로 표준양성과정 수립은 현재 3.4년제로 구분된 유치원교사 양성기관간의 편차를 줄이고, 유치원교사교육에 적합한 양성과정의 체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사양성 수업연한을 늘려 전문성을 높여야

유치원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타급별 교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교사양성 수업연한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타당하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2.3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양성되는 교사를 4년제 대학에서 양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양성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교육현장에서 해결하려는 방안은 지양해야 한다. 즉 발제자가 제시한 3.4년제에 따른 교사 자격의 등급화, 차별화 특히 전문대학 출신교사에게 일정기간 비담임제 실시, 1급 승급 시 현장경력 차등요구제, 4년제 학사학위 취득 후 2급 정교사로 전환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 이는 현장교사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4.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제고

공.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교사의 수업준비 부족, 충분한 역량 발휘를 억제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다. 유아교육의 질을 좌우할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행정인력의 배치로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유치원은 행정인력 배치 강제 범조항이 없다. 전체 유치원 중 10%정도의 유치원에만 일반사무직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립유치원은 1%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공립유치원의 68%가 1학급 규모임을 감안하면 공립유치원 대부분의 교사가 수업과 유치원운영 업무를 병행하는 현실이다. 이는 ‘... 행정직을 둔다.’는 초중등교육법의 강제조항과 달리 유아교육법에는 ‘...행정직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로 적정 수업시수를 담당한다.

종일제유치원이 확대되면서 유치원교사의 수업시수는 고무줄처럼 늘어나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2006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공립유치원교사 7명 중 1명꼴로 1일 8시간 수업과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법제화 논의 단계에 있는 초중등교사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시 유치원교사도 포함해야 한다.

3) 유치원장의 임기제한으로 교직사회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공립유치원장의 임기제한이 없어 ‘한 번 원장은 영원한 원장’으로 재직할 수 있다. 이는 유치원교직사회의 관료화를 고착화시키고 민주적인 원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교원의 사기 저하, 교직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다. 초중등, 대학교육기관은 이미 1996년부터 교(총)장임기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4) 사립유치원교사의 보수지원으로 사기를 높인다.

유치원교사 78%가 사립교사이다. 초중등과 달리 사립유치원교사는 정부로부터 보수 지원을 받지 못해 공립유치원교사와의 보수차가 2배에 이른다. 2005년 여성부 자료에 의하면 사립교사의 75%가 5년 미만의 교직경력자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5~6%에 불과하다.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반이며 출산휴가비 지원유치원이 43%에 불과하고 일부는 결혼 및 출산을 이유로 해임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공문조차 교사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비민주적인 운영 문제까지 겹쳐 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일부지역(도,농복합 인구 30만이하)의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5. 유·보 통합을 위한 자격일원화와 전제 조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동일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격기준 동일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1) 충분한 양성과정의 수업연한 확보 및 표준화된 양성교육과정의 수립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치원교사에 비해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다양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 경로와 양성과정의 정비가 요구된다. 4년 또는 최소한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확보하여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된 양성교육과정을 실시한다. 또한 기존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에게는 학점이수, 재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통합 자격증 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2) 자격발급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수체계 조정

자격기준을 최소 유치원교사 자격기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된 자격증발급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특히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격증발급처를 반드시 교육부로 해야만 교사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추후 사립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보수체계를 초중등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공공성 강화로 유치원교사를 전문인으로 대우해야

교원은 전문직으로서 적절한 대우와 고수익을 보장받는 사회적 지위를 누린다. 세계노동기구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유네스코의 특별위원회에서 1966년 채택한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는 교원의 지위가 전문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05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치원교육이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는 공.사립을 막론한 열악한 근무여건, 사립교사의 낮은 보수와 짧은 근속기간과 높은 이직률, 자율성의 결여에서 알 수 있듯 매우 낮다. 이는 초중등교원에 비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 취약한 유아공교육의 기반과 유치원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 미미한 행. 재정적 지원을 가져와 공. 사립 유치원교사의 전문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유.보 이원화 체제와 시설 난립에 따른 과열경쟁은 근본적인 해결과제다. 유. 보 통합, 공립유치원확대,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 확대, 교육과정 시행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하고 유치원 학제화를 서둘러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주제발표 2

중장기 육아비용 지원계획의 기대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서 문 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1. 목적 및 내용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현재 및 중장기 정책의 현황과 기대성과 등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다 합리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의 보육, 유아교육 지원의 시설유형별, 지역별 현황 제시
 - 영유아 보육, 교육 등 육아지원서비스와 사교육 이용률과 이에 따른 비용의 집단간 격차 제시
 - 정부의 2010년까지의 중장기 정책 방안에 따른 소요예산 규모, 비용의 부모-정부 분담, 성과를 제시
 -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육아비용 과부담가구 부담완화,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관점에서 향후 발전적 정책 대안과 소요예산 추정

2.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재정지원 현황

가. 육아 지원서비스 비용의 중앙-지방 정부간 및 정부-부모 분담

- 보육, 유아교육, 농어민 양육비 지원 등 정부의 2006년도 육아 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총 2조 9556억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0.35%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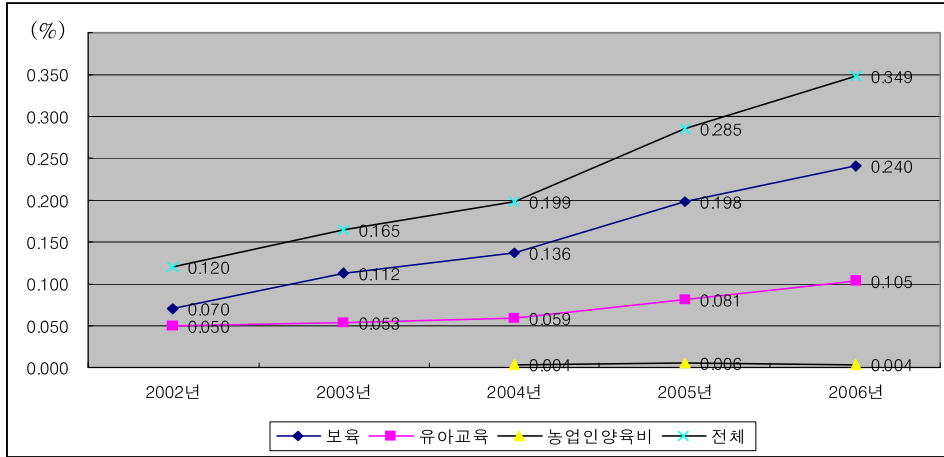
〈표 1〉 보육, 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국 비	지방비	계	GDP 대비 비율
보육	781,784	1,256,318	2,038,102	0.240
유아교육	199,652	686,359	886,011	0.105
농업인양육비	15,742	15,742	31,484	0.004
계 (비율)	997,178 (33.7)	1,958,419 (66.3)	2,955,597 (100.0)	0.349

자료: 여성가족부(2006).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농림부(2006). 예산 현황.



[그림 1] 육아지원 예산의 GDP 대비 비율

- 육아지원 예산의 중앙과 지방 정부의 분담비율은 각각 33.7%, 66.3%임.
 - 보육예산은 중앙 38.4%, 시·도 및 시·군·구가 61.6%를 분담함.
 - 유아교육은 중앙 22.5%, 지방이 77.5%를 부담함.
 - 농어민 양육비 지원은 국고와 지방의 분담률은 50:50임.
- 유아교육과 보육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2005년 4조 8171억원으로 추정됨. 이 중 61%를 부모가 부담하고 39%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음.
 - 보육비용은 정부 분담 40.2%, 부모부담 59.8%로 분석되었음.
 - 유아교육 비용은 정부가 34.4%를 부담하고 부모가 65.6%를 부담함.

<표 2> 육아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 2005

단위: 백만원, %

구분	보육비용+교육비용		보육비용+교육비용+농어민양육비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보육·교육 비용				
- 부모부담	2,988,210	62.0	2,943,486	61.1
- 정부지원	741,060	15.4	785,784	16.3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1,087,877	22.6	1,087,877	22.6
계	4,817,147	100.0	4,817,147	100.0

〈표 3〉 보육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 2002~2005

단위: %(백만원)

구분	2002.6 ⁴⁾	2003. 6 ³⁾	2004. 6 ³⁾	2005. 6.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비용)
보육료 ¹⁾				
- 부모부담	74.6	69.5	65.8	59.8 (1,779,398)
- 정부지원 ²⁾	12.3	12.2	14.6	19.3 (573,932)
인건비·운영비지원 ³⁾	13.1	18.3	19.6	20.9 (622,368)
계 (총 비용 추정액)	100.0 (1,693,214)	100.0 (2,088,284)	100.0 (2,392,071)	100.0 (2,975,698)

주: 1) 보육료는 2002년 보육실태조사 및 2004년 전국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음.

2) 정부 지원은 영유아, 만 5세아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등임.

3) 인건비·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금임.

자료: 서문희 외(2003).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 교육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 2005

단위: 백만원, %

구분	비용	비율
교육비		
- 부모부담	1,208,812	65.6
- 정부지원	167,128	9.1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465,509	25.3
계	1,841,449	100.0

주: 1) 교육비 부모부담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전체 아동 총 교육비인 비용 사립유치원 204,300원, 국공립유치원 86,100원을 이용하여 5% 증가를 적용하였음. 2005년 취원아수는 국공립 원아수 124,030명, 사립유치원 417320명임.

2) 교육비 정부지원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임.

나. 육아비용 지원의 운영주체별, 지역별 격차

□ 운영주체별 공적자금 투입의 차이로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공립에 비하여 부모 부담은 많지만, 1인당 총 소요비용은 더 적음.

- 보육은 2005년의 경우 국공립시설 이용 만 1세 미만 아동을 보면 정부지원 43만원, 부모부담 30만원으로 총 73만원의 비용으로 보육을 받는 반면에, 민간시설 아동은 부모부담은 35만원이지만 정부 지원금은 15만원이므로 보육비용은 총 50만원임. 2006년에 영아의 기본보조금을 상향조정하였으나 아직도 국공립보육시설 비용의 80% 수준임.

〈표 5〉 시설유형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분담(2006년 기준)

단위: 원, %

구분	국공립·법인			민간		
	정부지원	부모부담(비율)	계	정부지원	부모부담(비율)	계
1세미만아	434,868	299,000(39.5)	733,868	249,000	350,000(58.4)	599,000
만 1세아	267,174	299,000(51.6)	566,174	104,000	308,000(25.2)	412,000
만 2세아	195,305	247,000(55.8)	442,305	69,000	254,000(78.6)	323,000
만 3세아	53,541	153,000(74.0)	206,541	—	204,000(100.0)	204,000
만 4~5세아	44,064	153,000(77.6)	197,064	—	204,000(100.0)	204,000

주: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정부지원은 보육교사 5호봉 인건비와 시설장 인건비 5호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부모 부담은 정부지원단가 및 서울시 민간시설 보육료 상한선을 적용한 것임. 취사부 인건비 미적용.

자료: 여성가족부(2005). 내부자료.

- 유치원도 2005년 원아 1인당 연간 정부 예산이 공립 350만원, 사립 46만 8천원으로 차이가 큼.

〈표 6〉 시설유형별 아동1인당 교육비 지원액

단위: 천원, 명

구분	2004년			2005년		
	총 사업액(A)	원아수(B)	유아1인당 평균지원액 (A/B)	총 사업액(A)	원아수(B)	유아1인당 평균지원액 (A/B)
사립	95,640,814	417,807	229	195,255,442	417,320	468
공립	384,628,059	123,638	3,111	433,329,783	124,030	3,49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내부자료.

□ 사업예산의 지역간의 격차도 존재함

- 보육사업의 경우 2006년도에 시·도 특별사업 예산은 국고지원 사업비의 약 13%인데, 서울특별시는 특별사업예산이 국고 지원사업 예산의 42.8%로 가장 높고, 광주와 충청북도는 1.0%미만으로 최저 수준임.

〈표 7〉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6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고사업비 ¹⁾ (A)	시·도 특별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비 (C)	국고사업대비 시·도 특별사업비 (B/A)	국고사업대비 시·군·구 특별사업비 (C/A)	재정 자립도 ²⁾ 평균	재정 자주도 ³⁾ 평균
전체	1,723,613	224,843	89,646	13.0	5.2	54.4	80.2
서울	266,742	114,275	36,486	42.8	13.7	94.3	95.4
부산	109,345	5,141	691	4.7	0.6	70.2	80.7
대구	98,303	871	1,602	0.9	1.6	70.7	84.7
인천	67,986	11,629	1,823	17.1	2.7	69.2	76.5
광주	87,837	479	18	0.5	0.0	57.5	75.1
대전	46,429	7,477	430	16.1	0.9	72.8	83.9
울산	34,397	3,350	312	9.7	0.9	65.7	82.6
경기	301,207	49,935	26,268	16.6	8.7	75.2	85.7
강원	68,537	2,822	677	4.1	1.0	26.7	75.3
충북	72,481	527	8,248	0.7	11.4	31.3	76.4
충남	82,260	5,351	2,703	6.5	3.3	35.3	74.1
전북	112,470	4,569	2,172	4.1	1.9	23.9	70.1
전남	111,149	4,657	2,173	4.2	2.0	20.0	67.8
경북	95,170	1,038	1,847	1.1	1.9	27.8	76.2
경남	121,867	7,048	3,648	5.8	3.0	38.8	75.0
제주	47,433	5,674	548	12.0	1.2	33.8	72.9

주: 1)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것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을 합한 것임. 비율은 천원 단위에서 산출한 것임.

2)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100

3)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금+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100

자료: 1) 서문희 외(2006).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여성가족부(2006). 자치단체 특수시책.

3)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개시스템

◦ 시·도 별 아동 1인당 유아교육 예산은 공립유치원은 전라북도가 연 547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라남도과 강원도가 높으며 대전이 227만원으로 가장 낮음.

- 사립유치원은 광주가 76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이 72만원으로 높고 서울과 경기가 31만원으로 가장 낮음.

〈표 8〉 시·도별 공립 및 사립 유치원 총예산 및 유아 1인당 예산: 2005

단위: 백만원, 명

구분	공립			사립		
	총 사업액(A)	원아수(B)	유아1인당 평균지원액 (A/B)	총 사업액(A)	원아수(B)	유아1인당 평균지원 액 (A/B)
전 체	433,330	124,030	3.49	195,255	417,320	0.47
서 울	29,229	8,588	3.40	23,685	76,714	0.31
부 산	10,324	3,181	3.25	25,316	35,333	0.72
대 구	8,812	3,487	2.53	17,103	24,774	0.69
인 천	14,738	4,577	3.22	13,273	21,559	0.62
광 주	9,205	3,108	2.96	9,846	12,869	0.76
대 전	6,705	2,955	2.27	8,579	17,144	0.50
울 산	7,876	2,258	3.49	5,752	15,460	0.37
경 기	84,379	31,031	2.72	30,218	98,500	0.31
강 원	25,838	6,324	4.09	4,830	9,206	0.53
충 북	27,324	7,763	3.52	4,560	8,467	0.54
충 남	30,759	8,667	3.55	4,756	12,034	0.40
전 북	39,021	7,137	5.47	8,653	13,421	0.65
전 남	41,941	9,946	4.22	5,909	11,132	0.53
경 북	41,822	10,701	3.91	13,059	24,861	0.53
경 남	48,235	12,009	4.02	17,968	32,438	0.55
제 주	7,122	2,298	3.10	1,753	3,408	0.5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내부자료. 재구성.

3.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이용 및 비용의 격차

가.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총 비용의 차이

- 소득분위별 이용률은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은 소득수준별로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특기보습학원, 개별그룹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에서 모두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이용률도 높음.
 - 소득 1분위 대비 10분위 이용률은 특기보습학원은 5.8배, 개별그룹방문지도·학습지는 3배, 개인양육지원은 약 2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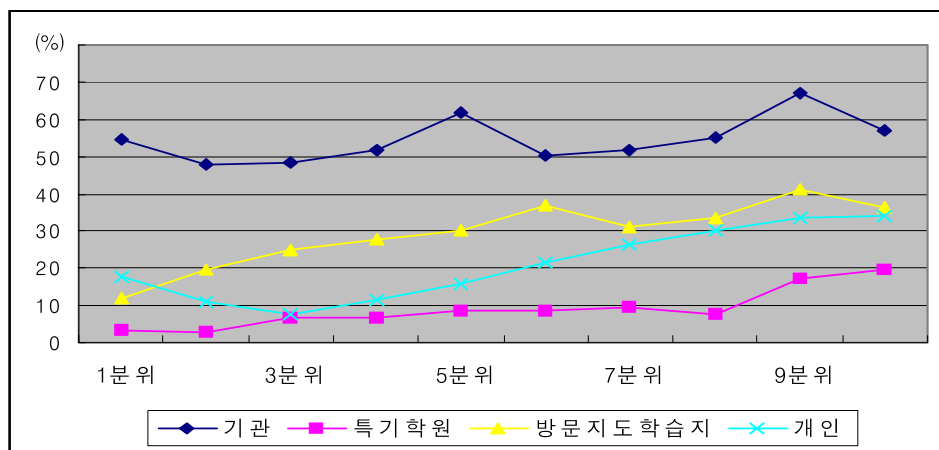
〈표 9〉 전체 및 취업모 영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전체					취업모				
	보육 교육 기관	특기 보습 학원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보육 교육 기관	특기 보습 학원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전체	54.1	8.7	29.6	20.2	(2,961)	69.1	10.6	27.6	48.1	(957)
1분위	54.5	3.4	12.0	17.9	(233)	66.7	-	5.3	16.1	(56)
10분위	56.9	19.7	36.2	34.2	(218)	59.8	17.0	34.9	66.4	(107)
10분위/1분위	1.0	5.8	3.0	1.9	-	0.9	4.9 [#]	6.6	4.1	-

주: ** $p < .01$, #는 10분위/2분위임.

자료: 여성부,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2] 영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 비용 지불 아동만을 대상으로 비용을 보면 육아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소득 1분위 대비 10분위가 전체 2.8배, 영아 4.6배, 유아 2.6배로 영아의 비용 격차가 큼. 소득 대비 비율은 1분위가 14.7%로 가장 높고, 10분위는 7.2%로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비율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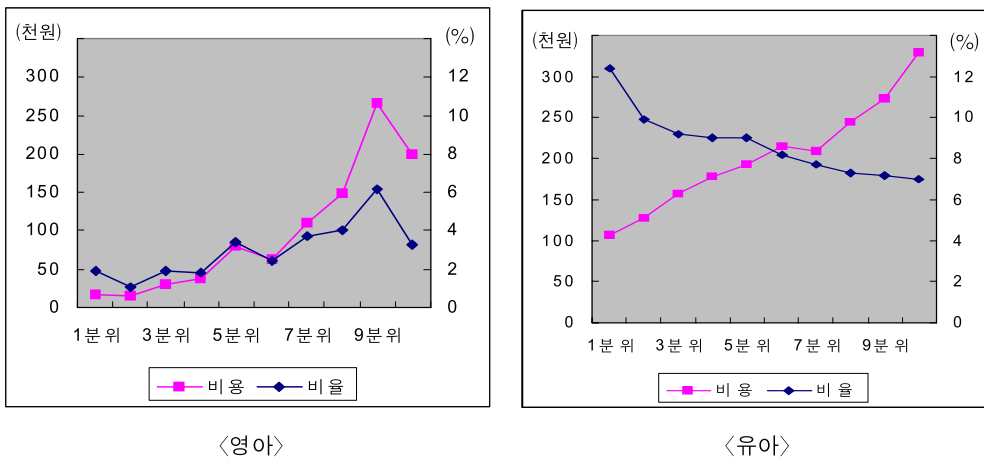
-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10분위가 1분위의 전체는 3.8배, 영아 11.0배, 유아는 3.1배임.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1분위가 8.6%로 다소 높고, 그 이외는 분위별로 거의 차이가 없음.

〈표 10〉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지불아동 소득계층별 지출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1,985)			영아(수=393)			유아(수=1,592)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235.0	9.6	12.9	269.6	8.5	13.5	226.4	9.8	12.8
표준편차	165.4	7.3	9.5	221.5	6.2	10.7	147.2	7.6	9.1
1분위	130.0	14.7	13.9	80.6	7.9	7.3	138.6	15.9	15.0
10분위	357.9	7.2	13.0	369.5	6.1	14.4	353.8	7.5	12.5
10분위/1분위	2.8	0.5	0.9	4.6	0.8	2.0	2.6	0.5	0.8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3] 전체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비용 및 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

- 소득이 아동 1인당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력은 15.3%임. 이외 모취업, 도시거주, 대학원이상 학력, 4년제대 학력 변수가 유의하여 이들 변수를 포함하면 설명력은 21.5%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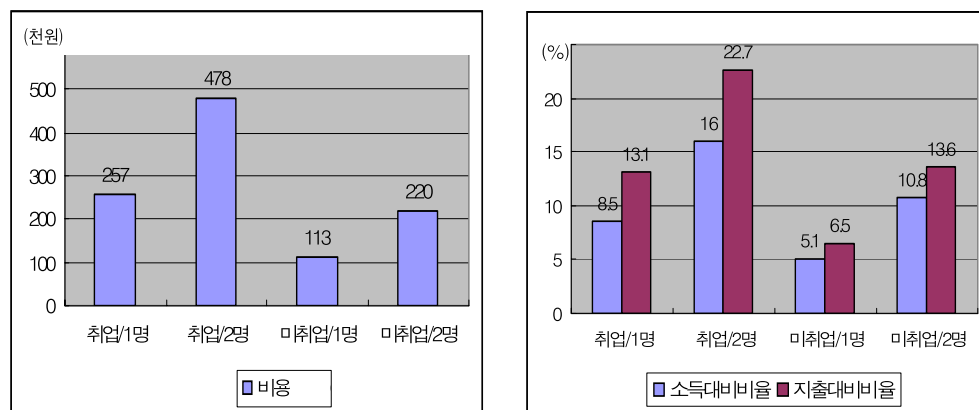
〈표 11〉 영유아 육아지원비용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구분	B(Std. Error)	Beta	누적 Adjusted R ²
(상수)	65.33(8.92)**		
소득분위	17.51(1.31)**	0.29	0.153
모 취업	59.34(6.62)**	0.18	0.186
도시거주	38.75(7.49)**	0.11	0.198
모 대학원이상	119.81(21.14)**	0.12	0.208
모 4년제대학	34.67(8.08)**	0.09	0.215

주: ** $p < .01$, 제외된 변수는 영유아수, 고등학교, 중학이하, 3년제대학 변수임

나. 가구 단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총 비용의 차이

- 가구당 영유아 양육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동수가 1명일 때보다 2명일 때 1.75배의 비용이 소요되고,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평균 1.9배가 됨.
 - 아동수 1명인 가구는 각각 소득 대비 및 지출 대비 비율이 각각 6.6%, 9.2% 이고, 2명 이상은 12.4%, 16.4%로 비율이 높아짐.



[그림 4] 모취업 및 자녀수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 가구 단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비용은 소득 10분위는 1분위 대비 4.0배로 아동 1인당 비용의 격차 3.8배와 유사한 수준임. 아동수별로는 아동 1인 가구는 4.4배, 아동 2인 이상 가구는 3.4배임.

- 소득은 가구당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4.5%의 설명력을 가짐. 여기에 영유아수가 포함되면 20.4% 증가하고, 모 취업여부 변수를 다시 포함되면 27.0%가 되고 이에 거주지 및 학력변수가 포함되어 29.5%가 됨.

〈표 12〉 영유아 가구 육아지원비용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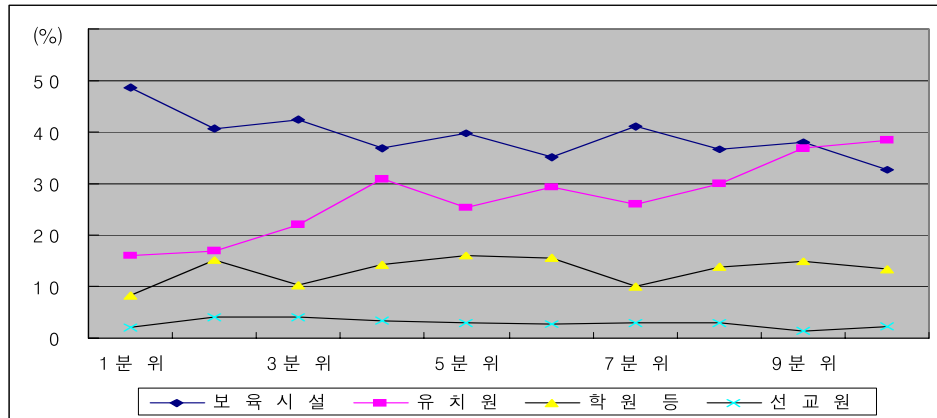
구분	B(Std. Error)	Beta	누적 Adjusted R ²
(상수)	-140.83(20.36)**		
소득분위	23.02(1.87)**	0.30	0.145
영유아수	120.32(8.99)**	0.30	0.204
모 취업	118.76(9.77)**	0.28	0.270
도시거주	57.70(12.88)**	0.10	0.283
모 대학원 이상	92.27(22.16)**	0.09	0.288
모 4년제대학	40.41(10.86)**	0.09	0.295

주: ** $p < .01$, 제외된 독립 변수는 고등학교, 중학이하, 3년제대, 최연소자녀연령 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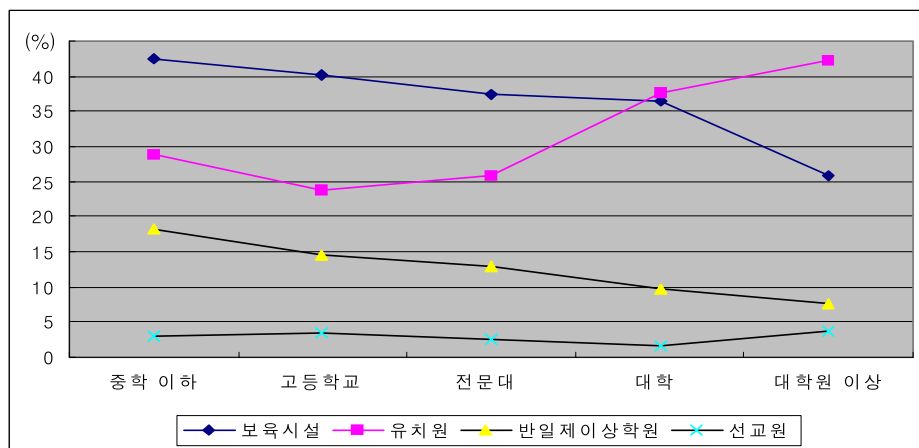
- 영유아 가구전체의 육아지원비용은 소득 대비 8.4%이고 지출대비 11.4%임.
 - 전체 가구의 10분위 육아지원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7.9%이고 1분위는 9.8%임. 지출 대비 비율은 10분위 13.3%이고 1분위는 9.3%임.

다. 서비스유형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총 비용의 차이

- 보육교육기관 중 보육시설은 저소득층이 선호하고 유치원과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음.
- 보육시설 이용률은 소득분위별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으나, 1분위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10분위가 가장 낮음. 또한 모가 취업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이용률이 높아짐.
- 유치원은 보육시설과는 반대로 1, 2분위에 비하여 9, 10분위의 이용률이 13%p가 높음.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가 이용률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읍·면에 비하여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이용률이 높음.
- 반일제 이상 미술학원 이용은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가 이용률이 높은 것은 유치원과 동일한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은 높아지는 경향이고, 읍·면에 비하여 도시에 거주할수록 이용률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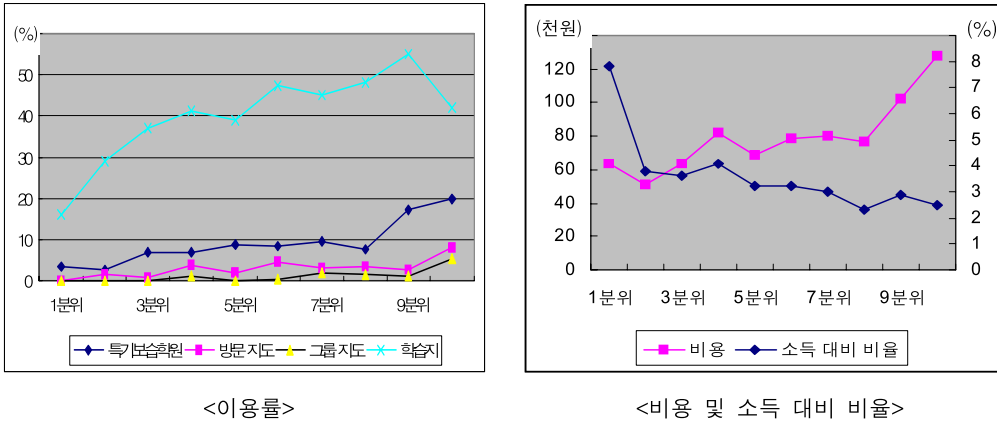


[그림 5]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기관 이용률



[그림 6] 유아 모 학력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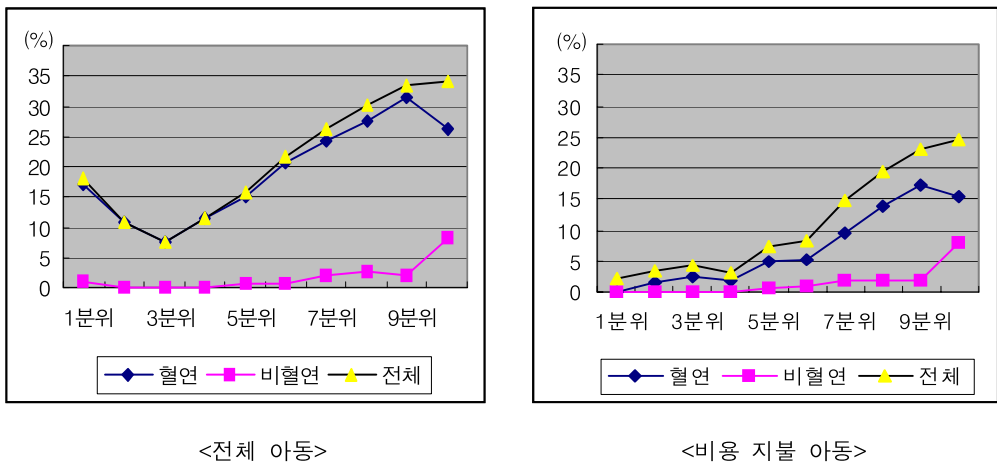
- 특기학원 등 유아 사교육은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비용도 많음. 그러나 비용의 가구 소득이나 지출 대비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낮음.
 - 학원 이용률은 1분위 대비 10분위 이용률은 5.8배임.
 - 특기학원 이용 시 비용은 1분위 대비 10분위가 2.0배임. 그러나 소득 대비 및 지출 대비 비율은 0.3, 0.6으로 분위가 낮을수록 비율이 높음.



[그림 7] 소득계층별 사교육 이용률과 사교육비용 및 소득 대비 비율

□ 혈연 및 비혈연 지원서비스 비용은 소득계층과 비례함.

-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 양육지원을 받는 비율은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높아짐. 그러나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3분위가 최저인 변형된 U자 형태인데, 이는 저소득층의 혈연 지원서비스는 상당수가 무급이기 때문임.
-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영아는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비용은 증가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감소함. 유아는 이러한 일관성을 찾기 어려움. 10분위의 1분위 대비율은 전체는 5.0, 영아는 3.3, 유아는 4.3배임.



[그림 8] 전체 및 비용지불 아동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4.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보육·교육 지원 계획과 과제

가. 육아비용 지원

- 보육과 유아교육 수요 아동수는 통계청이 2004년에 수정 추계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자료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수요율을 추정하였음.
- 보육 수요율은 2010년 42.1% 추정되고, 아동수는 2010년 122만명 정도로 추정됨.

〈표 13〉 보육수요율 추정: 2006~2010

단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세아	6.8	8.5	10.1	11.8	13.5
1세아	18.1	21.7	25.4	29	32.6
2세아	39.3	48.5	57.7	58.7	60.0
3세아	47.4	52.9	58.5	64	64.8
4세아	43.0	44.2	45.5	46.7	48.7
5세아	34.5	33.9	32.8	32.8	32.8
계	31.8	35.3	38.4	40.6	42.1

주: 2006년은 2006년 6월 보육통계에 기초하여 산출함.

〈표 14〉 보육수요 아동수 추정: 2006~2010

단위: 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세아	32,065	39,906	47,091	54,720	62,204
1세아	86,123	102,175	118,460	134,320	150,180
2세아	187,367	230,298	271,062	273,141	277,273
3세아	226,705	252,093	277,156	300,136	301,004
4세아	220,373	211,009	216,066	220,989	227,997
5세아	204,604	173,645	156,282	155,635	154,927
5세 이상아	49,605	50,000	50,000	50,000	50,000
계	1,006,842	1,059,124	1,136,118	1,188,941	1,223,585

주: 2006년은 2006년 6월 보육통계임.

- 유아교육은 수요율은 2008년 44.7%, 2010년에 52.6%로 추정되고, 유아교육 아동수는 2010년 74만명 정도로 추정됨.

〈표 15〉 유아교육 수요율 추정: 2006~2010

단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3세아	16.2	22.8	29.4	36.0	36.0
4세아	33.3	39.9	46.6	53.3	53.3
5세아	49.3	53.1	56.8	60.6	67.2
계	34.4	39.3	44.7	50.4	52.6

주: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표 16〉 유아교육 수요 아동수 추정: 2006~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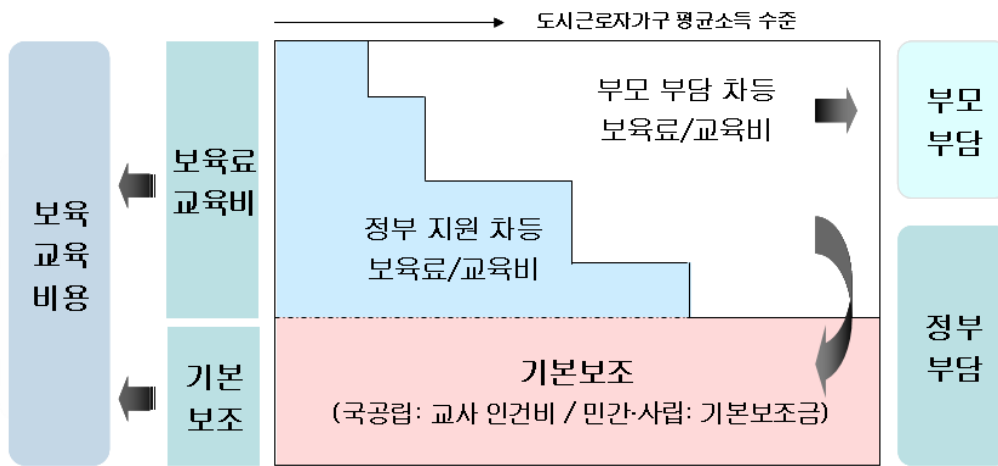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3세아	77,669	108,706	139,428	168,827	167,225
4세아	170,652	190,668	221,626	252,221	249,533
5세아	292,870	271,854	270,848	287,545	317,410
만 5세 이상아	4,585	5,000	5,000	5,000	5,000
계	541,191	576,228	636,901	713,593	739,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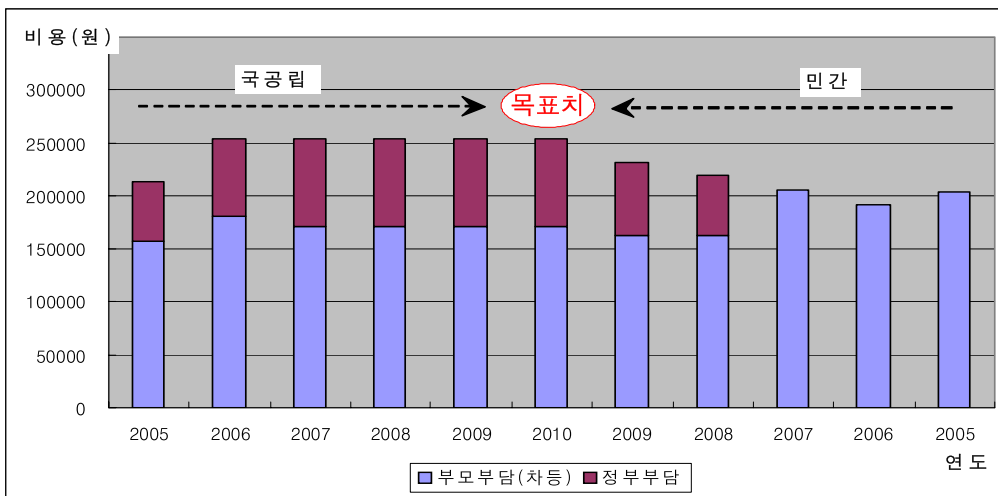
주: 2006년 4월 유치원 통계임.

□ 모든 육아기관 이용 아동에게 기본보조 지원

- 육아지원 기관에 대한 평가가 낮은 이유는 다수인 민간시설의 낮은 서비스 수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들의 서비스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민간시설 이용 아동에게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임.
 - 국공립기관에는 일찍부터 인건비 형태로 기본보조 지원이 있음.
 - 여성부가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산출한 「표준보육료·교육비」는 교육과 보육이 다르고 연령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비용 수준이었음.
- 영아는 종전의 영아 지원을 2006년부터 '기본보조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재정지정하였고, 유아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평가를 거쳐 2008년 3월부터 본격 지급한다는 계획임. 연차별로 확대하여 2010년에 목표치에 도달함.



[그림 9]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 지원 구성도(2007)



[그림 10] 만 3세아 부모-정부 보육비용 부담 비율 변화

- 아동 중 만 2세아는 3.0%, 유아는 8.0%가 가격규제 예외 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

〈표 17〉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비용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

유형	구분	비율	기준
고위 추정	0, 1세아	-	- 표준보육비용 이상 부담 가능 · 0세아 72만원, 1세아 50만원, 2세아 38만원, 3세아 25만원, 4세아 23만원
	2세아	5.0	
	유아	12.0	
	전체	10.6	
중위 추정	0, 1세아	-	- 표준보육비용+10% 이상 부담 가능
	2세아	3.0	
	유아	8.0	
	전체	6.9	

주: 2004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 소요예산은 민간시설 유아 기본보조금이 도입되는 2008년 2조 2765억원이고, 2010년에 3조 5431억원으로 추정됨.

□ 차등보육료·교육비 확대

- 0~4세아 보육료·교육비 재정 지원 대상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수준까지 소득계층별 차이를 두어 차등 지원함.

〈표 18〉 소득수준별·연도별 차등 비용 지원 계획(안)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지원비율							
		2003 이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층	법정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 계층	40	60	80	100	100	100	100	100
3층	50%까지	-	40	60	70	80	80	80	80
4층	60%까지	-	-	30	40	50	60	60	60
	70%까지	-	-	-					
5층	100%까지	-	-	-	-	20	30	30	30
6층	130%까지	-	-	-	-	-	-	30	30
7층	130%초과	-	-	-	-	-	-	-	-

자료: 여성가족부(2006). 중장기 보육 발전계획안: 새싹 플랜.

- 0~4세 차등보육료/교육비 확대에 따른 총 비용은 2006년 7410억원이며, 2010년에는 1조 987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됨.

□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확대

-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2007년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로 만 5세

아 전체 아동의 70%를 지원하고, 2009년 이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수준까지 확대하여 전체 아동의 80%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임.

- 소요 예산은 2006년 5027억원이 2010년에는 7772억원 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 새싹플랜(안)에서 제시된 중앙정부의 12세 이하 장애아 지원아수는 2010년 25,000명임. 장애아 유아교육도 무상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음.
- 소요예산은 2010년도 25,000명의 장애아동 보육에 123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다자녀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 비율을 현행 비용의 20%에서 2007년부터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올려서 50%까지로 확대함.
- 다자녀 육아비용 지원 예산은 2006년 40,000명에 261억원이 아동수 및 지원 비율 증가에 따라 증가해서 2010년에는 993억원으로 추정됨.

□ 농어민자녀 육아 비용 추가 지원

-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정규모 이하 농지 소유 농·어업인에 대해 부가적으로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함.
- 농어민 자녀 보육료 교육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7년 442억원, 2010년 약 398억원으로 추정됨.

□ 입양아 무상보육제도 도입

- 새싹플랜(안)에서는 2007년도부터 입양아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계획함. 아동 규모는 약 2,000~2,500명의 아동을 목표로 함.
- 2007년에 2,000명 대상으로 만 3세아 보육료를 적용하여 추정하면 소요예산이 약 42억원임.

나.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국공립기관 확충

- 국공립·법인 보육시설과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모두 2007년부터 이용아동

을 전년도 대비 연 10% 확대함.

- 보육시설 설치 비용은 부지 비용을 포함하여 2010년 예산은 1588억원으로 추정되고, 유치원 신증설 예산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 10% 이상 확대하면, 2010년 예산은 132억원으로 추정됨.

□ 종일제 유치원 확대

- 종일제 운영 유치원 확대와 시설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강사 수당은 2007년부터 적용함.
- 종일제 유치원의 확대를 감안하여 2007년은 해당 교사의 90%, 2008년부터 대상자에게 연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하면 총비용은 2010년에 1431억원이 됨.

□ 시간연장형 보육 확충

- 시간연장형 교사를 2005년 2,000명에서 2010년 10,0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함.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국고와 지방정부 예산을 합하여 2007년 520억원 규모이지만 대상 교사수 증가와 함께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 1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

- 2006년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및 인구 30만명 이하 소도시 소재 사립유치원 교사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학급담임수당을 2008년에 교사의 50%, 2009년 75%, 2010년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 2010년 아동수를 반당 20명으로 가정하고 해당 유치원 교사수에게 모두 월 11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약 342억원이 소요됨.

〈표 19〉 보육·교육비용 소요예산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용 지원					
기본보조 ¹⁾					
- 보육	593,023	856,589	1,431,354	1,806,488	2,276,521
- 유아교육	407,000	470,085	845,184	1,066,830	1,266,613
차등보육료·교육비					
- 보육	598,956	856,803	1,145,718	1,364,551	1,552,346
- 유아교육	142,073	226,978	320,868	419,604	435,141
만 5세아무상보육·교육					
- 보육	232,758	247,965	234,986	280,890	292,998
- 유아교육	269,909	313,535	328,755	418,758	484,190
장애아보육지원	61,043	76,914	89,733	108,353	123,664
다자녀육아지원	26,140	41,174	57,634	94,563	99,292
농어촌육아지원	31,484	44,200	42,400	41,200	39,800
입양아무상보육·교육	-	4,240	5,570	5,850	6,140
소계	2,362,386	3,138,483	4,502,202	5,607,087	6,576,705
인프라 확충 및 개선					
국공립기관 설치 ²⁾					
- 유치원	7,508	8,671	9,972	11,467	13,188
- 보육시설	77,800	104,404	120,065	138,074	158,785
운영시간 연장					
- 종일제 유치원 확대	10,000	103,366	124,660	138,460	143,050
- 야간보육 확대	39,000	52,000	95,000	129,000	150,000
유치원교사 담임수당	4,350	4,350	16,183	27,199	37,565
소계	138,658	272,791	365,880	444,200	502,588
계	2,501,044	3,411,274	4,868,082	6,051,287	7,079,293

주: 1) 사립유치원,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과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포함.

2) 보육시설 설치비는 건축비 이외에 매년 순 신축은 110개로 가정하고 개소당 3억원의 부지 구입비를 포함함.

다. 성과 및 과제

1) 성과

가) 예산의 확충

□ 2010년 기본보조와 차등보육료·교육비,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등 7가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의 규모는 6조 5767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내용별로는 기본보조에 가장 많은 53.9%의 예산이 소요되고, 다음으로 차등

비용 지원에 30.2%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표 20〉 보육비용 지원 소요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기본보조	차등 보육료 교육비	만5세아 무상 보육교육	장애아 보육	다자녀 육아지원	농어촌 육아지원	입양아 무상 보육교육	계
예산	3,543,134	1,987,487	777,188	123,664	99,292	39,800	6,140	6,576,705
비율	53.9	30.2	11.8	1.9	1.5	0.6	0.1	100.0

- 국공립유치원인건비 등 시설별 지원을 유아교육 총비용에 포함하고, 이를 기본보조에 포함시키면 총 비용이 7조 793억원 정도로 증가하게 됨.
- 총 비용의 GDP 대비 비율은 0.65%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정부의 육아비용 분담 비율이 국민 기대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임.
- 보육의 경우 추정 결과를 보면 총 비용은 2006년 정부가 48.1%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0년에는 총 보육 비용은 6조 100억원인데 이 중에서 68.6%를 정부가 부담하고 31.4%를 부모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

〈표 21〉 보육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

구분	정부	부모	계	정부 분담비율
2006년	1,424,735	1,534,974	2,959,709	48.1
2007년	1,961,357	1,635,463	3,596,820	54.5
2008년	2,812,058	1,595,621	4,407,679	62.5
2009년	3,451,929	1,657,472	5,109,400	67.6
2010년	4,121,864	1,887,950	6,009,814	68.6

주: 기본보조금 지급은 2~5세아 소득별 상위계층 제외하였으며, 부모 추가비용은 고려하지 않았음.

- 유아교육은 국공립유치원 인건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010년 총 유아교육 비용은 2조 7793억원인데 이 중에서 78.7%를 정부가 부담하고 21.3%를 부모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은 정부와 부모의 분담이 보육시설과 유사한 수준임.

〈표 22〉 유아교육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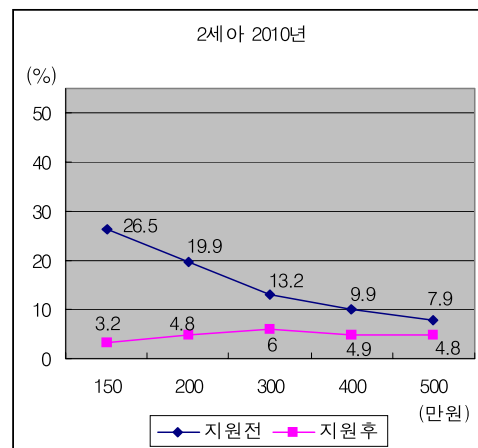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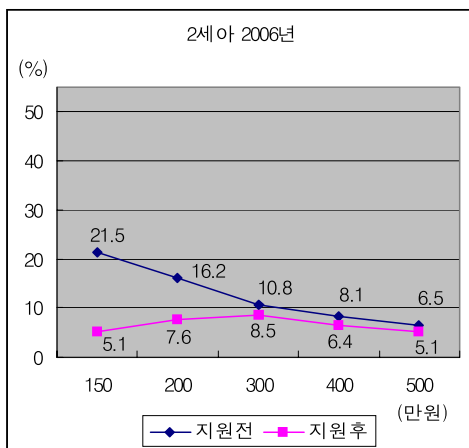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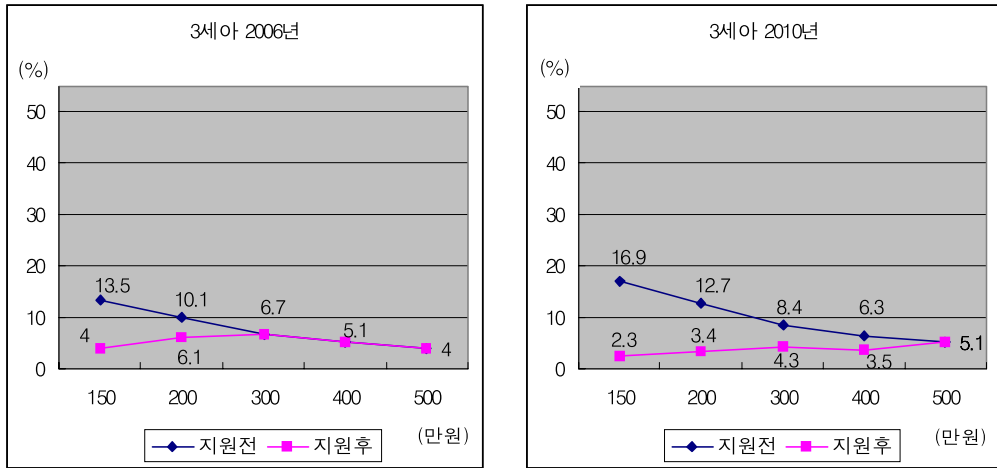
구분	정부	부모	계	정부 부담비율
추계1				
2006년	411,982	692,458	1,104,439	37.3
2007년	540,513	724,666	1,265,178	42.7
2008년	954,221	573,404	1,527,625	62.5
2009년	1,283,505	616,568	1,900,073	67.6
2010년	1,502,088	662,413	2,164,501	69.4
추계2				
2006년	818,982	731,880	1,550,861	52.8
2007년	1,010,598	694,785	1,705,382	59.3
2008년	1,494,819	511,115	2,005,933	74.5
2009년	1,905,192	519,177	2,424,369	78.6
2010년	2,185,943	593,344	2,779,287	78.7

주: 추계2는 국공립 유치원 인건비 등 시설별 지원을 포함하였음. 현재 인건비 등 2006년 시설별 지원 규모 수준 유지로 가정하고 물가상승률 반영, 부모 종일제 등 추가 비용 미고려

□ 가구의 육아 비용부담 역시 크게 감소할 것임.

- 2010년 기준으로 0세아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가구소득 대비 보육료의 비율이 14.9%~49.7% 수준이지만 정부가 지원한 결과 소득수준별로 4.4%~8.4%에 분포함.





[그림 11] 월 평균 가구소득 대비 부모부담 보육료 비율 사례

- 2004년 조사에서는 가구의 17.7%만이 월평균 가계지출의 5% 이하, 31.7%가 월평균 가계지출의 6~10% 이하를 적정수준으로 응답하였음.
- 이러한 육아지원 서비스 비용 부담은 소득수준이나 조세부담을 고려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표 23> 각국의 연도별 육아지원 재정의 GDP 대비 비율 비교

단위: %, 불

구분	연도	GDP 대비 육아지원 비용 비율	기준	국민1인당 GDP	조세부담률
호 주	2002 ¹⁾	0.45	0세~취학전 교육과 보호	27,900	28.3
프랑스	1998 ²⁾	0.66	3세~취학전 교육	23,927	47.6
	2004 ¹⁾	1.00	0세~취학전 교육과 보호	29,711	47.4
스웨덴	1998 ²⁾	0.59	3~취학전 교육	23,163	50.7
	2002 ³⁾	1.60	0세~취학전 교육과 보호	28,071	47.6
	2004 ¹⁾	1.70	0세~취학전 교육과 보호	30,711	48.0
한국	2006 ⁴⁾	0.35	0세~취학전 교육과 보호	16,000	16.6
	2010 ⁴⁾	0.65	0세~취학전 교육과 보호	26,000	-

자료: 1) OECD(2006). Start Strong II.
 2) OECD(2001). Start Strong
 3) OECD(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Canada, Finland Sweden and United Kingdom, Volume 4.
 4) 본 추정치

- 2010년 우리나라 육아지원의 규모나 부모와 정부의 부담, 가구소득 대비 비율, GDP 대비 비율이 현재 호주의 지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국민 1인당 GDP는 경상가격 26,000불로 추정함. 이는 OECD 선진국의 2000년 수준임.

나) 서비스 수준 제고

- 정부의 보육비용, 특히 민간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여건이 열악한 민간개인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을 개선하여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게 됨.
 - 급간식비, 인건비, 교재교구비가 종전보다 증가하게 되어 급간식 수준,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교재교구에서 개선이 기대됨.
- 정부 지원이 서비스 수준 제고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도 감독 요구
 - 지원과 기준 준수 연계 필요

다) 아동, 부모 및 시설간 형평성 증가

- 공적 부문에서는 아동 1인당 비용, 정부 부담 및 부모 부담의 격차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증가로 설립 운영주체가 다른 시설간의 교사 인건비와 서비스 수준 격차를 해소하게 될 것임.

라) 가격규제 예외 등 육아지원기관의 다양성 확대

- 가격규제 예외 시설이 나타나게 됨. 기본보조가 고소득계층에도 지원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또한 일부 고소득계층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겠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희망하는 민간개인보육시설은 비용을 자율화하여 고급화된 서비스를 희망하는 수요자 요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
 - 사회적 격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적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제고가 요망

2) 앞으로의 과제

- 제도화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서 소득별 격차나 시설유형별 격차는 대부분 완화될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는 그대로 남음.
 - 낮은 지원단가 수준
 -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지원 무차별
 - 이용시간과 비용의 이원화 부재
 - 지역별 격차
 -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

5. 육아비용 지원에 대한 정책 대안

가. 기본 방향

- 정부의 중장기 발전 방안이 달성되면 공적영역에서 소득계층별 격차는 해소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중장기 방안을 기초로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형평성, 예산의 효율적 사용, 육아비용 과부담 가구의 부담 완화, 목표로 하는 서비스 수준 상향 조정을 기본원칙으로 함.

나. 육아지원 정책 대안

- 정부의 중장기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공적영역에서 소득계층별 격차는 해소되고, 시설유형별 격차는 대부분 완화될 것이지만 지역별 격차, 사교육비 격차는 그대로 남게 됨. 또한 낮은 지원 단가, 취업모 지원, 이용시간과 비용의 이원화 등이 과제로 파악됨.
- 중장기 방안을 형평성, 예산의 효율적 사용, 육아비용 과부담 가구의 부담 완화, 목표로 하는 서비스 수준 상향 조정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합리적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표 24〉 제시된 정책 대안

구분	대안	개요
형평성 제고	1. 차등 지원 비율 부분 조정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상가구 영아와 유아 차등 지원 비율 조정
	2. 기본보조와 차등지원 통합 + 차등수준 세분화	- 기본보조와 차등지원 통합 - 현재 7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소득수준별, 연령별로 부모와 정부 부담액을 고시
	3. 지역간 재정 격차 해소	- 지방 재정상태를 고려한 재정분담 차별화 및 적정 투자 유인
	4. 사교육비 완화	- 공적 영역에서 특별활동 선별 수용으로 유아 사교육 격차 완화
	5. 육아 비용 지원 대상 확대	- 등록보육 수용 및 지원
효율성 제고	1. 이용시간과 비용 이원화	- 0, 1세아는 취업모 등 선별적 지원 - 만 2세아 이상은 시간 및 비용 이원화
육아비용 과부담 가구 부담 완화	1. 영아보육료 상한제 + 이용시간과 비용 이원화	- 0, 1세아 보육료를 만2세아 수준인 25만원(2006년 기준)으로 조정 - 이용시간과 비용 이원화 방안 적용
	2. 취업모 추가 지원	- 중산층 취업모 세제 혜택 등 추가 지원
	3. 출생순위별 추가 지원	- 출생순위만으로 육아 비용 추가 지원
서비스 질적 기준 제고	1. 교사 근무여건 개선	- 서비스 수준 자체 상향 조정 필요 - 교사 근무시간 준수 및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상시교사 제도 도입

1) 형평성 제고

□ 차등보육료 지원 비율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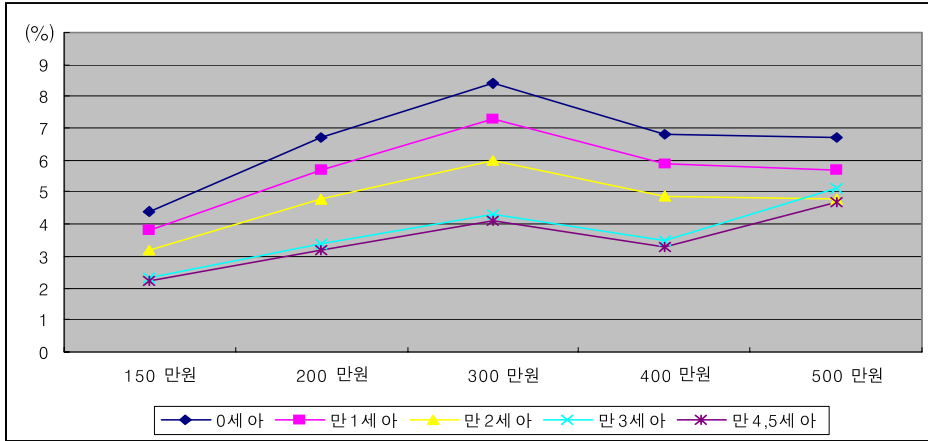
- 단기방안으로 소득계층별로 소득 대비 육아서비스 비용 비율이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부분 조정함.
- 2009년 이후 유아는 2009년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130% 가정은 지원 비율을 당초 30%를 15%로 축소하고 영아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100% 가정은 지원 비율을 당초 30%에서 45%로 증가시킴.

〈표 25〉 소득수준별·연도별 차등 비용 지원 계획과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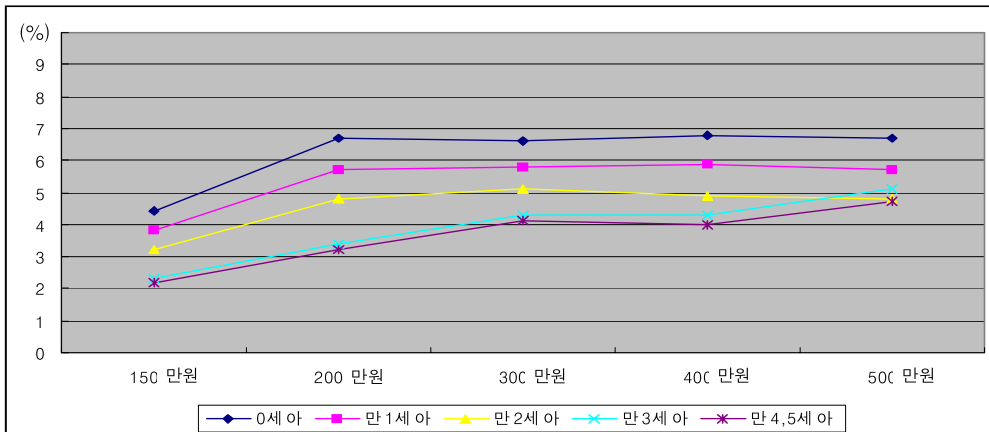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당초 지원비율 ¹⁾		변경안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5층	70~100%까지	30	30	30	45	30	45
6층	100~130%까지	30	30	15	30	15	30
7층	130%초과	-	-	-	-	-	-

주: 1~4층은 변동없음.



[그림 12] 당초안 월 가구소득별 소득 대비 보육료 비율



[그림 13] 대안 시 월 가구소득별 소득 대비 보육료 비율

- 2010년 예산은 정부 예산이 당초안보다 보육은 218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유아 예산은 감소하지만 영아 예산이 그 이상으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총 예산은 증가함.
- 지원체계 일원화 및 차등지원 계층 세분화
 - 현재 5계층 차등지원은 동일 계층내 형평성 유지에 한계가 있고, 기본보조와

차등보육료의 이원화된 지원체계가 개념 및 행정상 혼돈 초래

- 중장기적으로 차등지원 단계를 세분화하고 기본보조와 차등 지원금으로 나누어 있는 정부 지원을 일원화하여 계층별로 정부와 부모의 비용 부담액을 매년 정액 또는 비율로 고시하는 방안을 제시

〈표 26〉 2007년 영아 보육비용의 정부와 부모의 부담

단위: 천원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0세아		만 1세아		만 2세아	
		정부	부모 ¹⁾	정부	부모 ¹⁾	정부	부모 ¹⁾
1층	법정	653	-	451	-	348	-
2층	차상위 계층	653	-	451	-	348	-
3층	50%까지	581	상한-581	388	상한-388	296	상한-296
4층	70%까지	473	상한-473	293	상한-293	217	상한-217
5층	100%까지	364	상한-364	197	상한-197	165	상한-165
6층	130%까지	292	상한-292	134	상한-134	86	상한- 86
7층	130%초과	292	상한-292	134	상한-134	86	상한- 86

주: 1) 부모는 상한에서 정부부담액을 뺀 만큼을 부담함. 상한은 각 시·도 지사가 정한 민간보육시설 상한가를 의미함. 실제로는 각 시·도별로 다른 수치가 들어가게 됨.

□ 지역간의 재정 격차 완화

- 지역별 보육 및 유아교육 재정 지원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 상태를 반영하여 국비 배정 비율의 지역별 차이를 두어야 함. 중앙정부는 시·도 별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시·도는 시·군·구의 재정상태 차이를 반영하여 재정을 차등화 하여 배분하여 지방교육재정도가 균등화되도록 조정이 필요함.
- 스웨덴의 지방세입 균등화(Income Levelling System)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가 됨.

□ 사교육 격차 완화

- 소득계층별 사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전체적인 보육이나 교육과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악, 미술, 체육 활동을 강화하여 부모와 아동의 건전한 특별활동 욕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함.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시설별로 지원하거나, 또는 부모와 부담이 필요할 경우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

□ 비용 지원 대상 확대

- 개인 서비스 이용 및 비용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010년부터 개인에 의한 등록보육의 실시를 허용하고, 이를 지원함. 0세아와 만 1세아 취업모 자녀에 한하여 이웃탁아모나 베이비시터, 조부모, 친인척 등이 일정 기간 이상을 보육할 경우에 보육제공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이들을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함.
- 0세아와 만 1세아의 약 10%인 6만명 정도에게 보육 기본보조에 준하여 연간 약 4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연 240억원 정도가 필요함.

2) 효율성 제고

□ 모 취업여부 등 조건에 의한 이용시간 이원화

- 모 취업여부별 등 가정 사정을 반영하여 이용시간과 비용을 유치원 종일제와 연장제 개념으로 이원화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
- 0, 1세아는 취업모 등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만 지원하고 2세 이상아는 시간과 비용을 이원화하여 적용
- 이 경우 재정 부담 축소 규모는 2010년 3881억원임.

〈표 27〉 취업여부별 보육·교육시간과 비용의 이원화 시 비용 절감 비율

단위: %

연령	보육				유아교육			
	종일제 비율	연장제 비율	연장제 비용의 표준비용 비율	당초안 대비 소요예산 비율	종일제 비율	연장제 비율	연장제 비용의 표준비용 비율	당초안 대비 소요예산 비율
0	80	-	66.9	0.8 ¹⁾	-	-	-	-
1	70	-	79.7	0.7	-	-	-	-
2	65	35	79.8	0.929	-	-	-	-
3	60	40	87.0	0.948	60	40	123.3	1.093
4	60	40	89.4	0.958	60	40	115.3	1.061
5	60	40	84.8	0.939	60	40	121.1	1.085

주: 1) $(0.8 \times 1) + (0 \times 0.669)$ 의 방법으로 산출하였음.

〈표 28〉 취업여부별 보육시간과 비용 이원화 시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당초예산			
기본보조 지원	1,431,354	1,806,488	2,276,521
차등보육료	1,145,718	1,364,551	1,552,346
만 5세아 무상보육	234,986	280,890	292,998
소계	2,812,058	3,451,929	4,121,865
시간과 보육료 이원화 시			
기본보조 지원	1,243,985	1,564,159	1,968,027
차등보육료	1,018,627	1,208,041	1,371,967
만 5세아 무상보육	220,561	263,756	275,125
소계	2,483,173	3,035,956	3,615,119
증감(이원화 예산-당초예산)			
기본보조 지원	▽187,369	▽242,329	▽308,494
차등보육료	▽127,091	▽156,510	▽180,379
만 5세아 무상보육	▽14,425	▽17,134	▽17,873
소계	▽328,885	▽415,973	▽506,746

〈표 29〉 취업여부별 유아교육시간과 비용의 이원화 시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당초예산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304,597	445,143	582,758
차등보육료	320,868	419,604	435,141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328,755	418,758	484,190
소계	954,220	1,283,505	1,502,089
시간과 보육료 이원화 시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328,257	479,747	628,225
차등보육료	344,360	450,522	467,208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356,700	454,352	525,346
소계	1,029,317	1,384,621	1,620,779
증감(이원화예산-당초 예산)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 23,660	△ 34,604	△ 45,467
차등보육료	△ 23,492	△ 30,918	△ 32,067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 27,945	△ 35,594	△ 41,156
소계	△ 75,097	△ 101,116	△ 118,690

3) 육아비용 과부담 가구 부담 완화

□ 영아 보육료 상한제와 이용시간 이원화 및 부모부담 상한제

- 만 2세아 보육료인 25만원(2005년 기준)을 상한액으로 하여 0세아와 만 1세

아의 부모부담을 만 2세아 부모 부담액과 동일하게 하고 차액은 모두 기본 보조로 지원함. 앞에서 제안한 이용시간 이원화에 따른 보육비용의 이원화를 그대로 적용함.

- 이 경우 정부의 중장기 계획안에 비하여 2010년도에 3302억원이 감소됨.

□ 취업모 지원

- 모의 취업여부가 육아비용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보육료나 교육비 소득공제 이외에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음.
- 취업여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이 바람직함.

□ 자녀 출생순위에 따른 추가 지원

- 출산력 제고 방안의 관점에서 2008년부터 출생순위만으로 두 자녀는 50%, 세 번째 자녀는 7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함.
- 기존 부모 부담 중 22.7% 정도를 부모 대신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되므로 이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함.

4) 육아지원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 육아지원서비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장시간 근무와 대체인력 결여로 인한 휴가나 교육 불참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인력을 확보함.
-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대체교사 확보 2가지 요인이 모두 개선된다고 가정할 경우 보육은 인건비는 27.8%의 상승효과가 발생함.

〈표 30〉 정원 79명 보육시설 기준 근무여건 개선에 따른 보육비용 상승

구분	내용	인건비 상승 비율
초과근무수당 지급	- 하루 1.5시간 연장 근무 인정	0.188
상시교사 확보	- 휴가, 교육, 출산휴가 등 년 평균 25일 인정 - 대체교사도 동일 휴가 인정	0.09
계		0.278

- 이렇게 할 경우 비용은 정부의 부모가 부담하면 정부와 부모가 각각 5209억 원이 부담이 증가됨. 그러나 총 비용 대비 정부의 부담 비율은 2.84%가 낮아질 전망이다.

- 유치원 교사는 담임수당을 중장기 방안에 포함함.

6. 맺는 말

-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된다면 2010년에는 공적영역에서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상의 격차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 부모는 비용의 30%만을 부담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010년 우리는 국민 1인당 GDP 수준이 26,000불로 추정한다면 소득수준 대비 육아지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이러한 성과는 몇몇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기대보다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보육비용 지원을 모두 달성하려면 2010년 기준으로 단년도에 인프라 비용을 제외하고도 6조 6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함.
 - 앞으로는 서비스 수준 향상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활용여부가 주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임.

특 리

김 순 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

김 심 환 (전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송 기 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 태 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김 순 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

발제자가 지적하신 대로 전체 유아교육예산은 GDP 대비 0.105%이고 이 가운데 중앙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22.5%, 지방정부는 77.5%를 부담하고 있다. 부담주체로 나누어 보면 정부가 34.4%를 부담하고 학부모가 65.6%를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액이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2005년 공립유치원 원아는 1인당 월 29만1천원, 사립유치원은 월 3만9천원을 지원받고 있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에 비해 7.4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역간 격차도 심각하여 16개 시도별 아동 1인당 유아교육 예산은 공립유치원은 전라북도가 연 547만원(월 45만5천원)으로 가장 높고 대전은 227만원(월 18만9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사립유치원 아동1인당 지원액은 광주가 76만원(월 6만3천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과 경기도가 31만원(월 2만5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 따라 공립과 사립에 따라 매우 심한 지원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은 우리의 아이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최초의 평등이다. 유아에 대한 교육은 학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비용 지원은 형평성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 학부모 부담 완화, 서비스 수준 상향 조정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한다.

발제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 1) 모든 육아기관 이용 아동에게 기본보조금을 지급하되 2010년까지 점차적으로 정부 부담액을 늘려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학부모 부담액을 동일하게 적용

- 2) 만5세 무상교육 확대(2009년 이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수준까지 확대)
- 3) 다자녀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4) 농어민자녀 교육비 추가 지원
- 5) 종일제 유치원 확대
- 6)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기본보조금제는 사립유치원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채 진행되고 있다.

2005년 여성부에서 발행한 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 보고서에 의하면 유아 1인당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 275,146원이고 국공립유치원은 364,700천원이다.

이 또한 교사들이 8시간 근로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것이고 12시간 운영하는 종일반의 경우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기본보조금제는 3-5세 유아에게 42,000원을 지급하고 학부모 부담액을 최대 21만 5천원으로 제한하여 표준교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종일반 운영까지 하라고 하는 것이다.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범실시되고 있는 기본보조금부터 국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유아교육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유아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인가이다.

신설 설립(국.공립.사립포함)보다는 기존 사립 유치원의 시설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경제적이다. 단설 유치원 하나 짓는 비용과 운영비라면 교사 1,000명에게 인건비지급이 가능하다.

한 개의 단설유치원 설립 비용을 보면(180명 규모)

- (1)건축비 10억
- (2)시설비 3억
- (3)버스구입비 5천3백만원
- (4)인건비 3억(연간)
- (5)운영비 1억3천만원(연간)으로

*제1차년도 18억6천만원 *제2차년도부터 5억5천7백만원의 국고가 소요된다.

180명의 원아를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으로는 재정 낭비임이 명백하다. 즉, 1차년도의 비용으로 956명(18억 6천만원 ÷ 12월 ÷ 16만2천원)의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이 가능하고, 제2차년도 부터는 연간 286명의 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이다.

2001년 인천광역시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단독 유치원의 경우를 보면 대지 2,000평, 건평 1,500평, 15학급 규모의 독립유치원을 70억을 투입 신설하여 현재 137명이 재원하고 있는바 건립 명분은 특수아를 위하여 추진하였다고 하나, 현재 일반반 7학급 특수반 8학급으로 그 명분이 점차 퇴색하고 있으며, 원아 모집을 위해 전 시내로 통학 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180명의 원아를 위하여 건설비만 70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재정낭비의 극치를 보여 주는 현실이다.

공립유아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유아수와 유치원, 어린이집인가 유아수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공립유아기관을 설립하고 그 외 지역의 경우는 인근 민간의 유희시설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며 보다 저출산 시대의 바람직한 대비책이다.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단지 개인을 위한 복지차원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 일 것이다.

정부는 만5세아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점차 그 대상을 넓혀가야 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유아, 농어촌 지역 유아들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다수 유아들이 다니고 있는 사립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현실화해야 하며 이것을 통해 부모들이 원하는 기관에, 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격차와 그로 인한 계층격차, 양극화 현상의 간극이 어린 시절부터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아이들이 그 능력을 제대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중장기 육아지원계획의 기대성과와향후 발전방안 토론문

김 심 환 (전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2010년 보육 예산이 6조 5,767억원까지 늘어나 OECD 국가 중 육아지원의 규모나 부모와 정부의 부담, 가구소득 대비 비율, GDP 대비 비율이 현재 호주의 지표수준과 근접하게 되고, 가구의 육아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성장일 것임

또한 예산의 획기적인 증가에 맞는 형평성을 살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육아비용의 부담이 많은 가구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목표로 하는 서비스 수준 상향 조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정책의 대안은 사회적 합의를 얻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영아와 유아의 지원비율이 동일하던 것을 유아를 낮추고 영아지원을 높이는 방안과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여 계층별로 정부와 부모의 비용 부담액을 매년 정액 또는 비율로 고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영유아의 보육비용 상한액은 각 시도에 지사가 정한 민간보육시설 상한가를 적용하여 실제 각 시도별로 다른 수치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현재의 대도시와 농어촌간의 보육료가 동일함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기본보조금지원방식의 문제를 보완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임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제시한 방안 중 0.1세아는 취업모 등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만 지원하고, 2세 이상은 시간과 비용을 이원화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 도시근로자 월평균 수입에 근접한 계층의 차등보육료 지원 비율은 낮추고 이보다 낮은 수입의 계층은 높이는 방안과, 영아보육료 상한제를 통하여 영아를 둔 부모의 부담은 월평균 25만원으로 두고 나머지 차액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눈에 띈

본 토론자는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육아지원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하고자 함

첫째, 육아비용 지원에 대한 정책 대안이 대부분 소득계층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지원에 치우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음 즉 영유아를 위한 지원이라기보다 가계지원 또는 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소득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는 있으나 서비스 수준이 자칫 평준화향화 될 우려가 있음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설치기준, 운영기준, 교사처우 등에 대한 합의 없이 동일한 지원은 부처에 따른 시설간의 차별로 갈등을 유발하게 됨 따라서 지원방법과 비율의 동일화는 어떤 형태로든 이원화된 현 유아보육 교육기관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 가능하다고 봄

셋째, 현재의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부여는 설립기반과 운영특성을 충분히 배려한 조건에서 출발하여야 함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강한 정책적 의지 아래 비현실적인 공공성으로 강제화하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임

넷째, 모 취업여부, 소득수준, 해당연령, 이용시간 등에 대한 차등지원방안은 우려도 있지만 한편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 중 이용시간별 차등지원은 이용시간별 보육료 차등수납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인가정원 등과 맞물려 시설운영의 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따라서 인가기준과 운영기준 등에 대한 법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섯째, 육아지원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로 제시한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책은 매우 소극적으로 보여 지며 특히 유치원 교사의 담임수당지원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서 벗어남 근본적으로 민간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한 일정부분의 인건비지원이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동시에 대체인력(상시인력)확보와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결론적으로

중장기 육아지원 계획의 발전방안에 대한 발제는 여성가족부에서 그동안 제시해온 중장기 4개년 보육계획인 새싹플랜의 단점을 나름대로 보완 하려고 고민했다는 느낌이 듦 그럼에도 남는 과제는 아동별 지원이 갖는 한계에 대한 해

결방안 제시와 소득격차에 따른 비용지원에 치우친 결과로 인한 서비스수준 확보에 대한 방안과 함께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 막대한 예산을 효과성 있게 형평에 맞게 서비스수준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지원방식을 교사인건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기를 바란다. 부모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육아비용은 보육시설 이용비용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에 적응하는데 들어가는 간접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가정에만 차등지원을 하고 평균이상의 가정에 지원하려던 예산을 민간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사용한다면 서비스개선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임. 이는 지원항목 단일화로 지원에 대한 재정의 투명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보육료 지원에서 기인될 수 있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바로잡기 위해 민간시설에 대한 지나친 관리감독 및 규제방안이 자칫 방만한 행정으로 이어져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옴

단번에 정책의 근간이 통째로 바뀔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가급적 단일한 항목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민간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의 대안으로 아동별 지원과 시설별 지원(인건비지원)의 병행 방안검토를 적극 권유함.

‘중장기 육아지원계획의 기대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송 기 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없는 토론자에게 좋은 발표문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서문희 실장님과 육아정책개발센터에 감사함.
- 이미 수립된 중장기 육아지원계획이 있어서 이를 대상으로 기대성과와 발전방안을 모색한 연구인지, 앞으로 중장기 육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인지 불분명함. 토론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가족부는 2006년 7월 「새싹플랜-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을 발표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에 중장기 유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없음. 따라서 토론자가 이해하기로 이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중장기 보육계획에 유아교육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중장기육아지원계획」을 모색하는 연구로 보임. 비전공자로서는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육아’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상식수준에서도 적절한 지 의문임.
- 이 연구는 육아비용 지원방안으로, 모든 유아교육기관 이용 아동에게 기본보조금 지원, 차등보육료·교육비 확대,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확대,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다자녀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농어민자녀 육아 비용 추가 지원, 입양아 무상보육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인프라 확충 및 개선 방안으로 국·공립기관 확충, 종일제 유치원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 확충,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음.
- 이 연구의 내용만을 보면,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하면 정부는 재원을 준비하고 있다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짐.
- 육아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왜 정부 지원은 늘어나야 하지만 학부모 부담은 늘어나면 안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임. 2006년 2조 5,000억원인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 규모를 2010년에 7조 800억원으로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확충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이는 실현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음.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에 의해, 유아교육지원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2008년부터 추가로 확보하

는 교부금이 6,300억원(2006년 불변가)에 불과하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2008년 예산은 2007년보다 1조 4,500억원이 늘어난 규모임. 육아지원예산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30%씩 늘어나야 하는 바, 이는 육아지원예산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기본보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지원하는 바우처 성격이면서도 아동이 아닌 기관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려움. 아동에게 바우처를 제공할 경우 아동을 유치하기 위한 육아기관의 교육서비스 경쟁과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인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육아기관에 기본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기관은 교육서비스 경쟁을 할 필요가 없으며, 기본보조금으로 교육서비스를 개선한다고 기대하기도 어려움. 먼저 아동이 기관을 선택하고 선택한 결과에 따라 정부가 지원을 하면 기관은 서비스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먼저 서비스 개선을 한 후 아동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선택을 받은 대가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논리적 오류가 확연히 드러남.
- 민간기관 교사의 인건비 수준이 낮다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교수학습비 수준이 낮다면 교수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 포괄적으로 지원할 경우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의 기대효과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
-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 차이가 심하므로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기본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민간기관은 고호봉 교사를 방출하고 저호봉 교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음.
- 가격규제예외기관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처럼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육료와 유아교육비를 자율화하는 기관으로 이해되나, 기본보조금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모순임. 기본보조라는 용어 속에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미가 들어있으나, 고소득 계층에게 기본보조가 지원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드러냄. 고소득계층이 기본보조를 받는 기관을 선택하면 보조를 받지만, 가격규제예외기관을 선택하면 보조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이런 문제는 기본보조가 아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기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됨.
- 현행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등록금을 규제받는 대신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재정결함보조금은 기본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임. 일반적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이 사립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며, 사립학

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재정결함보조제도는 부실 사학이 쓰러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을 뿐, 우수 사학을 육성하는 데 실패하였음.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재정결함보조금 제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재정결함보조금제도가 사학교육의 질을 개선하지 못했다면 기본보조금 제도도 육아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기 어려울 것임. 가격을 규제하는 대신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정부 지원금의 속성상 교육비 소요증가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육아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임. 가격 규제를 통해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연구자는 결론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된다면 2010년에는 공적영역에서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상의 격차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히고 있으나, 격차의 해소가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질는지 의문임. 혹시 하향 평준화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것이 기우가 아니길 바랍.

중장기 육아지원비용의 조달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이 태 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1. 참여정부와 육아정책

○ 참여정부 하 “육아의 사회화” 진전은 ‘복지서비스의 보편화’에 대한 의의 구현

- 참여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과 저출산에의 대응이란 목표 하에 육아정책에 대한 비교적 과감한 정책적 진전을 2005년부터 시행함.

- 특히, 오랫동안 보육의 사회화란 철학을 수용하지 않아 왔던 정부정책 기조를 과감히 벗고 전체 이용자의 80%까지 정부 재정지원의 대상화를 꾀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보편적 제도 구현’에 걸맞는 의의를 살리게 됨.

○ 참여정부 육아정책의 불안정한 면모들 여전

- 그러나 참여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이 정책이 지속적인 정책 지향점을 지니고 갈 것인지에 대해 아직 여러 가지 불안한 측면들이 노정되고 있음.

- 특히, 현 정부내에서도 아직 보육의 사회화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보육료의 자율화를 관철시키는 등 민간의 역할 증대와 형평성의 파괴를 통해 보육의 사회화와는 배치되는 엇갈린 정책기조가 일정정도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또한 현재 2010년까지의 육아정책 플랜이 막대한 자원마련 및 세부 실행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실현 가능성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후의 일관된 정책 수행과 관련한 불안함을 떨치기 어려운 형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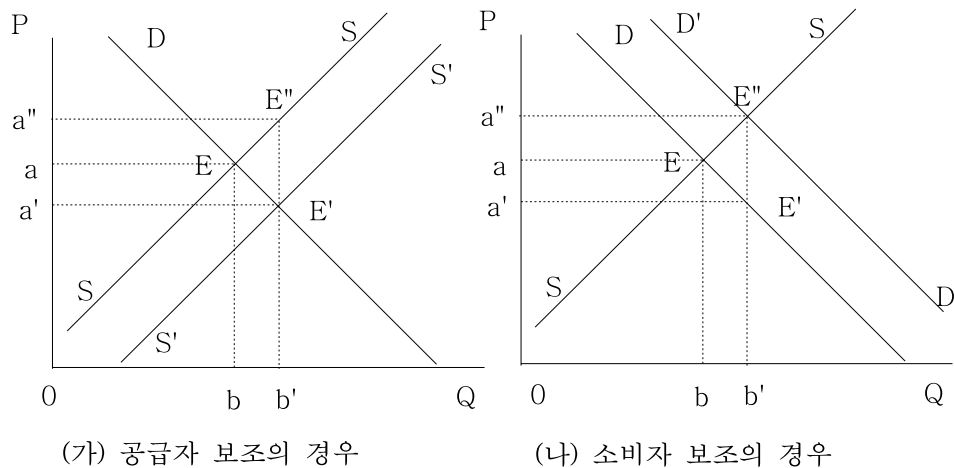
2. 육아비용 지원의 중장기 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할 과제들

1) 기본보조금의 역할과 규모에 대하여

○ 공급자 보조와 수요자 보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진지한 모색있어야

- 경제학적인 원리 상, 공급자에 대한 보조(주로 재정보조)와 수요자에 대한 보조(주로 가격인하 또는 구매력 보조)는 기본적으로는 아래 box에서처럼 동일함.

<그림 1>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의 분석



- 우선 첫 번째로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방법은 <그림 1>의 (가)의 그림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시설이 원래 공급하려했던 비용조건에 비하여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실제 단위당 소요되는 한계비용이 적어지므로 공급곡선 자체가 SS에서 S'S'으로 바뀌게 된다. 그 결과 처음에 E점의 균형점이 보여주던 적정가격 a와 적정 규모 b수준이 변화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a'의 가격으로 b'의 소비량을 누릴 수 있고 반면에 공급자는 a''의 가격에 b'의 공급량을 기록하게 되어 종전보다 각기 더 나은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때 정부가 (a''-a')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시설운영자에게 지원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쓴 보조금 규모는 빗금친 □a'a''E'E'으로 나타난다.

- 그러나 이러한 똑같은 효과는 정부가 시설 이용자에게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도 달성할 수 있다. <그림 1>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수요곡선 DD는 정부가 각자에게 이용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자신 스스로의 단위당 한계편익분에도 보조금의 편익분까지 고려된 더 많은 양의 소비욕구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D'D'으로 수요곡선이 상향이동하게 된다. 이때도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기 E점의 가격 a, 조달 규모 b수준에서 소비자의 가격은 a'으로, 공급자의 가격은 a''으로 그리고 거래수준은 b' 수준으로 변하고 정부의 장려금수준은 빗금친 □a'a''E''E'으로 전과 같이 나타난다. 역시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더 많은 보육시설 이용을 유도한 결과이기는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는 행정비용의 수준, 공급자의 행동양식, 수요자의 체감도 등을 종합하여 어느 것이 성과를 더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

- 본 토론자는

▷ 보육/유아교육시설 수가 많아 행정적 지원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

▷ 현재 공급기관의 수준이나 서비스 질의 내용 상 편차가 우심한 점

▷ 수요자의 정부지원에 대한 체감도가 극히 낮다는 점

등등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수요자에 대한 보조가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더 나은 정책수단이라고 보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은 양자를 적절히 절충시켜 놓음으로써 정책 집행에 앞선 현실 진단과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어떠한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음.

○ 기본보조금제와 차등지원제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음

- 발제자의 본문 내용에서도 기본보조금과 차등지원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좀더 명확한 일정이나 방식을 언급하지 않고 있음. 그렇지만, 발제문에 있는 아래 표와 같이 현재의 구도라면 기본보조금이 전체 소요예산의 53.9%를 차지하게 되어, 공급자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본문 표 인용)

〈표 20〉 보육비용 지원 소요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기본보조	차등보육료교육비	만5세아무상보육교육	장애아보육	다자녀육아지원	농어촌육아지원	입양아무상보육교육	계
예산	3,543,134	1,987,487	777,188	123,664	99,292	39,800	6,140	6,576,705
비율	53.9	30.2	11.8	1.9	1.5	0.6	0.1	100.0

- 따라서 향후 3년 내외의 시점을 두고 기본보조금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의 형태로 일원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 차등지원제와 그 비율에 대하여

○ 차등지원제에 대한 행정적 비용과 혼란의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해야

- 현재 7구간으로 구분하고 있는 차등지원제는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우리나라 소득과악의 인프라와 행정인력의 상황을 볼 때 상당한 무리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소득구간을 더욱 세분화한다든가, 지원율을 더욱 차별화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보아야함.

- 또한 향후 아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2010년 이후부터는 현재의 지원율을 고수한다면 전체 재원이 줄어들 것이므로, 오히려 소득구분단계를 줄이고 지원율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음.

3) 직접양육가정과 시설이용가정 사이의 형평성에 대하여

○ 취업모와 시설이용가정에 편중된 정책 지원의 문제를 해소해야

- 현재의 정책에 따라 가계의 보육/유아교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수요유발효과가 야기되고 따라서 취업모나 취업희망모에 대한 부담경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유발효과까지도 겸하게 됨.

- 그러나 영아의 경우, 부모의 직접 양육에 대한 의미도 경시할 수 없으므로 영아에 대한 직접 보육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나름대로 고려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영아기에 대한 육아수당 또는 아동수당의 일괄적 지급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음.

4) 안정적 재원조달 문제에 대하여

○ 추가적인 세원 마련해야

-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육아정책은 2010년경 모두 6조 6천억원 정도가 동원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일상적인 현재의 정부 예산에서 이를 조달하는 것은 결코 안정적인 조달방식으로 볼 수 없음. 정부가 특별한 재원을 연결시키지 않고 현재의 재정기조에서 해결하겠다고 본다면 이것 자체가 정책의 지를 의심받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물론 향후 재정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자영자 소득과악 등 세원을 확충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음. 그중에서도 좀더 확실히 육아와 관련된 재원을 사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 현재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20조에 달하는 조세감면액 중 실효성이 적은 것을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일몰제의 도입 등에 의해 적어도

5조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

▷ 또는 미래에 노인을 부양할 세대로서의 영유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서 정부가 일정부분을 빌어 투여하는 방안 등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체계에 대하여

○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해

- 그간 뜨거운 감자로 진행되어왔고, 지금도 그 구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바,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를 적절히 조정하고자 하는 정책지향점이 있어야 함. 아동발달의 특징 상 보호와 교육의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여야 하며, 이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시설이 프로그램 내용상이나 운영형태에서 3-5세사이의 아동을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관련부처와 기존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원적 체제를 고수한다는 것은 심각히 재고해 보아야 하는 문제임.

- 향후 적극적인 재정투여로 수요가 확대되는 극적인 환경변화를 활용하여 일원체제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3. 결론

○ 국민의 체감도 증진을 통해 정책의 불가역성(不可逆性)을 확보해야

- 모두(冒頭)에 적시한대로 아직도 현정부의 육아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 인지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던지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위해서라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적극적 정책구사가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가 체감되고 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자가 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전국민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제도가 결코 축소되거나 과거로 회귀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도록 해야 함.

- 그러나 아직도 국민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보내고 있고, 국민일반 역시 재원의 할애에 대한 당위성을 불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향후 정책당국자와 시민사회진영, 그리고 육아관련 종사자들의 역할이 이러한 점에서도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임.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1층
Tel. 02-730-7070 Fax. 02-730-3313